

2009 연구보고서(수시과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홍승아 · 김혜영 · 장미혜

KW
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개회식
14:00-14:20	사 회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개회사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변도윤(여성부 장관)
	발 표
	주 제 1 젠더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20-15:40	주 제 2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3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휴 식
	지정토론
	사 회 박찬무(교육과학기술부 국가사업단 테크노닥터)
16:00-16:50	토 론 1 윤혜린(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토 론 2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토 론 3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토 론 4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본부장)
16:5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목 차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 발 표 1 ■

- 젠더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1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2 ■

-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29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 표 3 ■

-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 55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윤희린(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75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 79

조영미(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82

이병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본부장) / 85

젠더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젠더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현재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지구생태계의 위기와 경제위기이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환경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위기의 축적과정이 있었으며 그 결과 지구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¹⁾. 또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경제위기는 명료하고도 확고한, 진행 중인 위기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위기는 우리 삶의 안전과 질을 위협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EU,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은 녹색성장 전략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수용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친환경 녹색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어 1990년대 초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등장하게 되고,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유도하게 되면서 녹색성장정책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UNEP는 2008년 녹색경제 이티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를 제시하면서 환경적인 투자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빈곤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정책시대를 선포하였으며, 이로써 녹색성장정책은 전지구적인 기조(Global Framework)가 되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현재의 위기를 뜨겁고(hot; 지구온난화), 평평하며(flat; 정보기술), 붐비는(crowded; 인구증가) 사회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의 결과 에너지 수급과 석유독재,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5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토마스 프리드먼, 2009). 이러한 위기의 해법은 보다 깨

1) 알래스카에서는 얼어붙어 있어야 하는 땅이 녹아버리면서 집과 도로가 무너지고 있으며, 북극곰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고, 태평양의 투발루에서는 섬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 이주가 불가피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라이너스, 2009).

끗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와 시스템, 에너지원과 윤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한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즉 녹색성장 전략은 에너지와 기술의 개발을 꾀하는 녹색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일자리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성장전략으로서,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녹색정보통신’, ‘녹색금융’ 등 다양한 하위영역들이 조성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국가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녹색성장전략이 부분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전반을 관통하는 경제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김승택, 2008). 이들 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관련정책을 비교적 일찍 시작한 독일에서는 녹색기술의 광범위한 해석을 통하여 녹색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녹색경제 개발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녹색기술을 생산성과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하며, ‘제4차 기술혁명’을 선도한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녹색혁명을 준비 중이며 자동차 보조금제도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저탄소사회’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원절약 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이창훈,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성장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관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과 함께 환경위기와 경제위기의 경험자임과 동시에 이들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주체이며,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러한 차이들을 형평성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의 개발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와 가치, 경험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발전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남녀의 경험과 욕구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책집행의 결과들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녹색성장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녹색성장정책에 젠더관점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녹색성장의 원칙은 여성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공간이나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리가 되고 있는 “남녀간 자원과 공간에 대한 동등

한 분배와 접근권”은 녹색성장의 원칙과도 매우 부합한다. 도시건설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족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필요한 요건들은 상당부분 환경과의 공존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일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내 충분한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취업기회 및 취업여건, 그리고 가족과의 여가를 위한 공원, 녹지 조성, 가족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원칙들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미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친환경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환경적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방식, 주민의 생활방식까지 친환경적 원칙과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정책이 여성과 가족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와 녹색성장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원칙은 지금까지는 주로 녹색기술, 녹색에너지, 녹색일자리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와 더불어 여성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세계, 생활문화,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시론적 차원에서 녹색성장 논의에 젠더의 관점을 접근시켜 보고자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논의과정에서 왜 젠더의 관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젠더관점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녹색성장 논의가 보다 성평등적 지향성을 갖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녹색성장정책 논의자체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젠더의 관점에서 조명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으며, 더불어 초기단계의 논의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상당부분을 놓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후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들로 보완되기를 바란다.

2.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발전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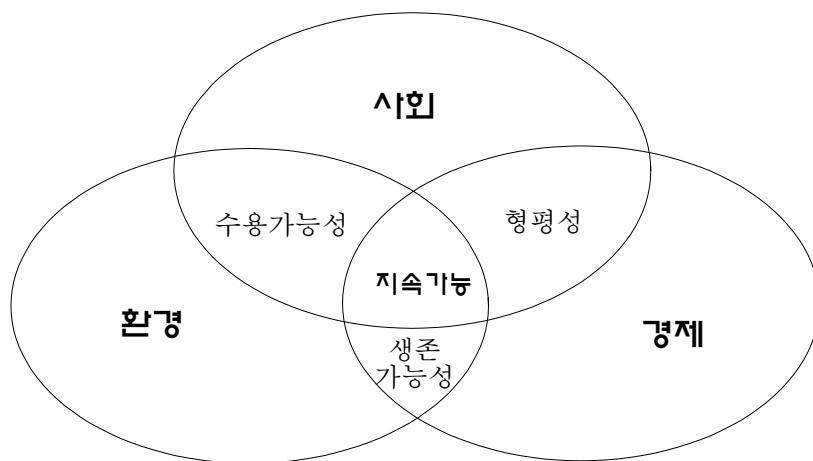
가. 지속가능 발전

21세기 세계적 화두는 종래의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²⁾. 보다 구체적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세계환경과 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회의결과물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1987년 Brundtland Report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

으로 James(1996)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국가나 도시가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환경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자원, 인간, 재료, 자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그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켜 현재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Faucheux 등(1996)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세대내·세대간 형평성과 생태학적 평형상태의 보전 등의 관점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이태중·송건섭, 200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성장과 발전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1)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현재의 발전 속에 수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발전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발전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내용과 특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7a).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꾀하는 3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각각의 영역에서는 수용가능성(bearable), 생존가능성(viable), 그리고 형평성(equitable)의 3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www.wikipedia.org)³⁾.



<그림 1> 지속가능 발전의 3체계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식 지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 다시 강조되었다. 이후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과발전위원회, 2002년 요한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기본명제와 원칙이 재확인되었다(UN ESCAP, 2006).
3) 혹은 여기에 더하여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는 문화영역을 네 번째 영역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우선, 대부분의 논의가 세대간의 형평성과 발전 및 환경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Faucheux 등이 지적한 세대내 형평성의 문제에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세대간의 균형문제만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도 국가간, 남녀간, 사회계층간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⁴⁾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미래 사회발전의 주요과제들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UNDP의(1998)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사람들의 소비행위는 세계적으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세계 최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소비의 86%를 차지하며, 최빈국 20%의 사람들은 1.3%만을 소비한다. 또 최상위 20%의 국가들이 전체 에너지의 58%를 소비하며, 최빈국 20%가 4% 미만을 소비한다. 더 불어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과소비를 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최빈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산림벌채 지역은 후진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산림벌채를 통해 생산된 물품들은 대부분 부유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남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은 목재와 종이를 얻기 위하여 열대우림의 7백만 헥타르를 상실하였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목재와 종이의 3/4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⁵⁾(Grover, et. al., 1999에서 재인용).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연속선 상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이란 환경오염을 낮추고 에코효율성(eco-efficiency)을 높인 생산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에코효율적인 경제계획에서부터 정부의 규제와 유인(녹색세제나 예산개혁(Green Tax and Budget Reform, GTBR), 환경과 관련된 경영체계내 의사결정, 녹색시장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UN ESCAP, 2006). 지속가능한 소비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되, 동시에 자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성물질과 폐기물 방출 및 오염을 줄여 다음 세대의 필요를 위협롭게 하지 않는 소비”로 정의된다. 1994년 오슬로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심포지엄에서는 인간의 소비행위가 천연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유해물

-
- 4) 시간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시간빈곤 속에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달리고 있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서지 않는 한 계속 달려야만 “일=삶”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동으로 인한 부자유”와 “노동을 통한 자유”(올리히 벡, 1999)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일과 생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 5)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인도의 생태학자인 반다나 쉬바는 ‘지구적 아파테이트(Global Apartheid)’로 명명한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자신들의 생활기반을 파괴당하여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로 구별되며, 생태적 측면에서는 지구화에 따르는 제반 위험의 결과물들을 이들 지역으로 침전시키고 있는 것이다(문순홍, 2001).

질을 방출하며,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심포지엄에서는 지구적 환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성찰, 실천의 고민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는 배경이다.

이후 이른바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를 주목하게 되었고 소비의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통합시키게 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성평등은 모든 층위에서 중요한 핵심이슈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소비행위에 있어서의 남녀 성차이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지속가능성 과도 연결시키게 되었다(Grover, et. al., 1999).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전지구적으로 거대한 소비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의 소비는 자신을 위한 소비라기보다는 가족의 일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소비행위 결정은(의식주 물품의 분배, 교육비에 대한 결정 등) 가족들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통수단 사용에 있어서도 성차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며 환경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젠더의 관점을 통합해서 소비의 문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⁶⁾.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성장의 혜택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된다(ESCAP, 2006).

나. 여성발전 패러다임

발전모델에서 젠더를 통합하는 방법은 여성과 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을 거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등의 과정을 통해 발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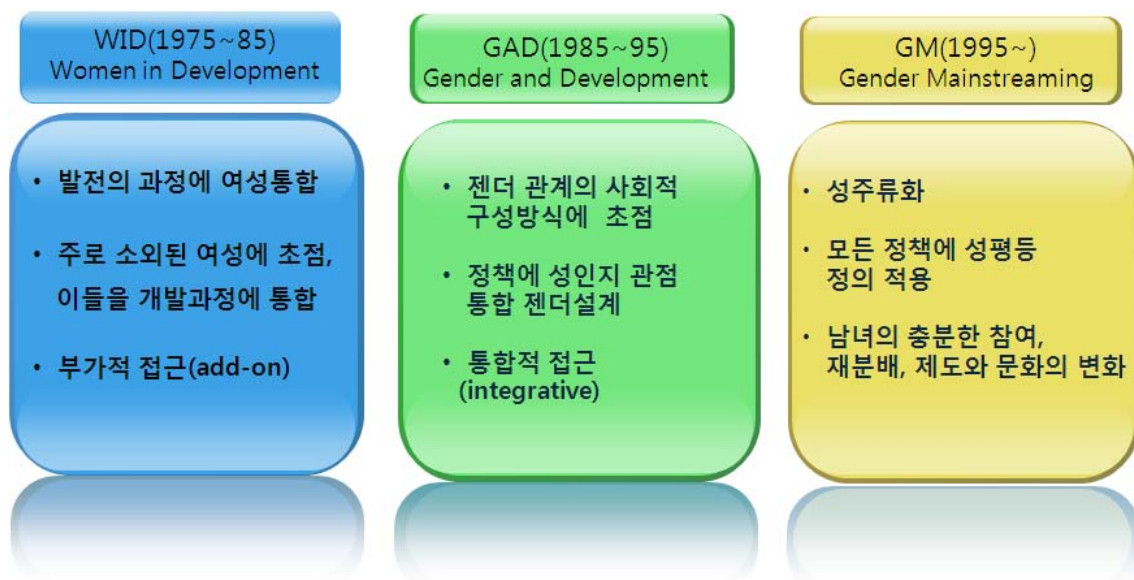
우선 WID는 유엔여성발전 10년간의 여성정책(1975~1985)으로서 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을 발전에 참여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특히 제3세계를 중심으로 발전의 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Boserup, 1980).

이후 1985년 나이로비 유엔 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새로운 여성발전전략으로 GAD 전략이 채택되었다. WID 전략이 기존정책에 여성을 부가시키는(add-on) 접근으로서 발전의 틀 안에서 자원재분배와 남녀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GAD 전략에서는 젠더관계의 사회적 구성방식에 초점을 두고 발전의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시킬 것을 강조한다. GAD 전략은 자원배분의 틀 내에서의 소극적인 변화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불평등을 제거하여 자원배분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함으로써

6) 이 점은 이후 4장 2절 “생활방식의 변화: 소비자로서의 의식과 행동”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임.

전반적인 사회적 젠더관계에서의 성평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보다 도전적인 전략이다(모저, 1993).

한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새로운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고 유엔 여성활동의 최우선 전략목표가 되었다. 유엔은 각국 정부와 기관들, 정책담당자들에게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인 시각을 주류화하는 가시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주류화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정의를 적용하여 남녀의 충분한 참여,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차이와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되, 더욱 포괄적인 성평등의 정의를 담고 있다(강남식, 2001). 성주류화 정책은 첫째, 주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둘째,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셋째, 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Corner, 1999).



<그림 2> 여성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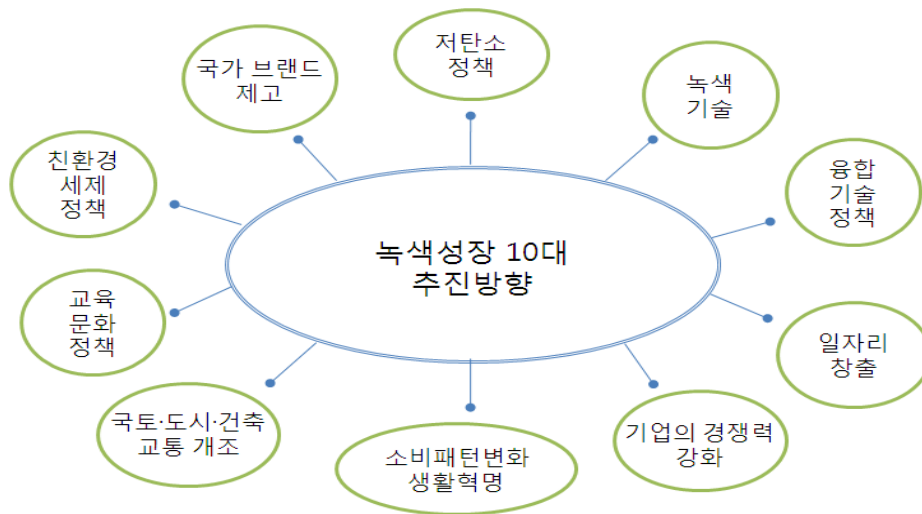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세가지 전략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젠더의 관점을 통합시키는 과정에서는 시기와 과정, 맥락에 따라서 세가지 전략이 적절히 융합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서는 녹색성장의 논의에 젠더의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몇가지 시론적인 시도를 하고자 한다.

3. 녹색성장과 젠더

가. 녹색성장정책의 정의와 범주, 접근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성장정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신성장동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세가지가 이른바 녹색성장전략의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들은 주로 녹색기술, 녹색에너지, 녹색일자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한국형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1.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이다.
2.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3. 녹색성장은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이다.
4. 녹색성장은 새로운 일자리(Green Job) 창출전략이다.
5. 녹색성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6. 녹색성장은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까지 개조한다.
7. 녹색성장은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이다.
8. 녹색성장은 교육·문화정책이다.
9. 녹색성장은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이다.
10. 녹색성장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다.



<그림 3>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10대 추진방향은 저탄소정책과 녹색기술(1,2,3), 녹색일자리(4),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5,10), 생활혁명과 교육·문화정책(7,8), 환경친화 세제정책(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탄소정책과 녹색기술, 녹색일자리는 현재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영역인 기술과 일자리영역으로 대표된다. 환경친화 세제정책은 국가수준에서 시행할 조세정책이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녹색성장정책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교육·문화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개인의 생활공간에서 개인적인 생활방식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경제영역이나 환경의 영역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여성과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다. 즉 기존의 논의가 기술과 에너지, 일자리가 녹색성장의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되는데 반해, 여성과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세계,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글에서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의 새로운 정책대상 영역으로서의 지역사회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는 개인들의 생활세계이며 생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지만,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나아가서 지역사회는 개인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자신의 생활공간, 생활세계의 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삶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場)이기도 하다(Voydanoff,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발견적인 성찰과 사회와 환경을 인식하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생활공

간, 생활문화, 지역사회 구성에 있어서 녹색성장의 원칙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 기반한 공동체는 지구화시대에 지역성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달을 통해 지역주민 구성원의 삶의 경험세계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녹색성장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기술과 에너지의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물리적 환경이나 기술에 대하여 주로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과 에너지, 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에너지 분야의 물리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지식자본과 인적자본의 향상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역시 주요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기술과 에너지,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되는 현재의 아동들에 대한 인적 투자, 사회적 투자도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나. 기술/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남성적인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젠더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생소한 영역이며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발전전략에 젠더이슈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성 주류화 전략에 의하면 에너지 분야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여성의 욕구와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극히 최근에 와서 에너지 정책에서 젠더분석을 시도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Cecelski, 2000).

첫째, 왜 에너지 분야에 젠더관점이 필요한가?

둘째, 왜 여성들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나?

셋째, 여성들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재생에너지 기술은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하여 여성의 두가지 역할에 기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에너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은 에너지의 소비자로 행위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에서도 여성을 예

너지 소비자로서만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소비자인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성인지성(gender sensitiveness)이 필요하다. 즉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을 위해 가사노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적인 에너지를 개발할 때에는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다 노동력이 덜 들고, 좀 더 편리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동시에 환경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⁷⁾. 식수공급, 음식조리, 곡물제분, 운반 등 인적자원과 노동력 절약을 위해 여성들에게 재생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식수를 길어 나르는 일, 식품 및 가사용구를 운반하는 일 등)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왔으며, 여타 분야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고 또한 이들 분야에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는 수준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경험과 욕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에너지 분야는 거대 규모의 자본집약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환경-발전”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욕구와 여성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참여자,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국제적인 여성조직 활동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기술자들의 양적, 질적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 분야에 여성들을 특별히 훈련하는 젠더훈련(gender training)이 필요하고⁸⁾,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젠더와 에너지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여성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Cecelski, 2000)⁹⁾.

다. 일자리 분야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녹색성장정책은 친환경 일자리창출이라는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95만개의 녹색일job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건강한 녹색사회, Green Growth, Great Korea). 과연 녹색성장정책내 여성일job은 무엇이며, 이들의 규모는 어떠한지, 여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 일

7) 예를 들어서 Agawal(1997)은 인도의 자연자원 사용과 계층 및 성불평등을 분석하였는데, 여성들은 연료, 가축사료, 물 등을 구해오는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물과 토양이 고갈되어 접근할 기회가 감소하자, 일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8) 특히 여성은 바이오가스, 수소전지, 태양열전지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성훈련의 필요성, 여성의 제한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초기 비용은 고비용이 되지만, 여성들이 얻는 높은 신뢰도와 낮은 직장이탈율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비용이 된다(Cecelski, 2000).

9) 보다 자세한 논의는 Cecelski(2000)를 참조할 것.

자리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는 녹색일자리, 친환경 일자리로 명명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일자리(Green Job)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적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인간다운 일자리를 지칭한다(Worldwatch Institute, 2007, 노동부, 2008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재생,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일자리가 대표적인 친환경 일자리로 분류된다. 친환경 일자리에선 기술자 및 숙련공이 참여하는 고급 연구개발 또는 관리업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에너지절약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설계사, 태양열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관련산업 종사자, 연료절약형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유기농제품 생산업자, 환경전문 변호사, 생태학 교육자 등이 모두 친환경 일자리에 속한다. 또한 노후건물을 개조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도 친환경 일자리이다(노동부, 2008).

한편, 미국에서도 현재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Pollin은 녹색정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녹색경제를 위한 일자리 형태를 다음과 같이 6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Pollin, 2008)

<표 1> 녹색인프라 분야와 일자리

분 야	내 용
녹색 인프라 분야	대표 직종
건물에너지 합리화	전기기술자, 냉·난방기 설치기사, 목수, 건축기기 기술자, 단열재 기술자, 보조목수, 산업트럭 운전수, 건축관리자, 건물검사관
대량수송/철도화물 수송	토목기사, 선로건축 기술자, 전기기술자, 용접공, 금속가공 기술자, 엔진조립 기술자, 버스 운전사, 배차원, 기관사, 기차차장
스마트 그리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자기기 조립기술자, 전자기기 기술자, 기계기술자, 팀조율자, 건설근로자, 운영전문가, 전력선 구축과 수리기술자
풍력	환경엔지니어, 철강노동자, 기계수리 기술자, 판금기술자, 기계운전자, 전자기기 조립기술자, 건축기기 전문가, 산업트럭 운전수, 산업생산 관리자, 일선 생산 감독관
태양열	전기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산업기기 기술자, 용접공, 금속가공 기술자, 전자기기 조립 기술자, 건축기기 기술자, 설치보조 기술자, 노동자, 건축관리자
개선된 생물연료	화학공학 기술자, 화학전문가, 화학기기 전문가, 화학기술자, 믹싱기기 전문가, 농업노동자, 산업트럭 운전수, 농업상품 구매자, 농업과 임업감독관, 농업감시관

자료: Pollin(2008)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까지의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는 특별히 젠더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젠더의 관점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성별효과가 있는가?

셋째, ‘여성’ 일자리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는가?

넷째, 여성일자리의 고용특성은 어떠한가?

위 질문에 기반하여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젠더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여성노동력을 투입할 적절한 일자리개발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는 녹색일자리에는 거의 남성기술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입안에서부터 젠더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만약 녹색일자리 정책이 남성중심으로 기본구조가 짜여지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사회적 계층과 성별간의 재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강력한 복지정책, 성평등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복구와 재투자계획(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의하면 2010년까지 30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 또는 창출한다는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집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가동되면 여성고용 창출효과가 42%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종,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건설, 제조업, 소매업, 유흥업의 흑인과 히스태닉계의 저학력 청년층 남성노동자들의 고용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동시에 성별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전체 평균 성비가 “50대 50”에 근접하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강선미, 2009).

또다른 예로는 스웨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성평등한 고용정책을 위해 노력해 온 스웨덴의 경우 노동시장내 성별분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988년 “평등정책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성별분리를 완전히 해체한 6개의 신종직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직종, 남성직종에 대한 분리를 타파하기 위하여 그 직종내 어느 한 성이 10% 미만인 직종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여성적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지원하고, 상급자에게는 필요한 특별

훈련을 지원하는 등,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전통적인 성별분업 해소의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였다(Ericsson & Jacobsson, 1985).

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저급·저임의 일자리에 집중되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녹색일자리는 적절한 보수와 안전한 작업조건, 일자리의 안정성, 전망, 노동권 등을 만족시키는 괜찮은 일자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UNEP, 2009). 특히 미래의 직업으로서 지식집약적인 그린칼라 전문직, 친환경 빌딩, 친환경 차량, 청정에너지의 생산에 종사하는 전문직종이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프리드먼, 2009), 더불어 이들 전문직종에의 여성일자리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념해야 할 문제는 녹색일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 상당부분은 이미 일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Pollin, 2008; Cleary & Kopicki, 2009). 최근의 한 브리프에 의하면, 녹색일자리에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 기초기술과 능력, 자격증 등이 필요한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즉 새로운 일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기술과 지식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상당부분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녹색일자리를 위한 자격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익힌 뒤에 특정 직종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Cleary & Kopicki, 2009). 따라서 녹색일자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 및 창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들을 녹색일자리 속으로 적절히 편입시켜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그림 4> 녹색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

자료: John J. Heldri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2009)

마지막으로 물량적 생산이 아닌 인적자본의 생산을 위하여 교육, 보건, 아동돌봄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녹색일자리의 범주를 도로, 교통체계 개선, 기술과 에너지의 생산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세대간 생존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환경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 여성-가족-지역사회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녹색성장정책 논의는 주로 녹색기술, 녹색에너지, 녹색일자리 등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의 원칙은 여성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이들의 생활문화와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실에 주목하고, 따라서 젠더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정책이 여성과 가족의 삶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를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이름을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지역사회”, “친환경도시” 등의 다양한 이름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환경적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방식, 주민의 생활방식까지 친환경적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원과 공간에 대한 남녀간 동등한 분배와 접근권”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절에서는 여성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녹색성장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생활공간과, 지역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의식과 행위가 나타나는 생활방식의 문제를 녹색성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생활공간의 변화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고가 시작된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노력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 생산분야에 해당되지만,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생활공간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생활공간의 재설계가 시작되어 친환경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며, 다양한 녹지와 공원 등을 충분하게 조성하고 최대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여 인위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태양광이나 지열 등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축설계로 에너지 절약효과를 누리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패시브하우스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친화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다만 향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패시브 하우스의 건설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도시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는 어떠했으며, 여성들의 욕구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교통체계 개편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영국의 교통공학자인 로드니 톨리에 의하면, 인류가 개발한 교통양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화석연료 다소비와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력교통수단을 총칭하는 적색양식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보전,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통행방식을 지칭하는 녹색양식으로 주로 보행과 자전거 교통, 버스, 지하철, 굴절버스 등의 대중교통 등으로 이해된다(박용남, 2007). 이런 녹색교통은 환경친화형, 공간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평등한 교통수단으로 이해되면서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면서 생태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사람을 위주로 하는 보행권의 확립과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도로다이어트가 진행 중이다¹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에서 실시된 조사는 큰 시사점을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전거나 도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양희 외,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보행의 권리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있다¹¹⁾.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이들 생활공간의 변화에는 젠더의 관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성들이 가족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필요한 조건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가 구축되고, 여성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취업기회 및 취업여건, 가족과의 여가를 위한 가족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은 안전의 문제이다. 안전은 생

10) 도로다이어트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줄이고 대신 보행자도로를 넓히는 도로의 개선을 의미한다.

11) 중앙일보. "세계는 자전거 혁명 중". 2008. 4.1~3 일자 참조

활환경의 안전과 폭력·학대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유해환경 및 유해식품으로부터의 안전 등 다차원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이다. 우선 생활환경의 안전이란 자동차로부터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보행자 거리, 도로면이 평탄하여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또한 도로의 턱이 급격하거나 가파르지 않아 어린이나 노인들이 다치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안전의 개념 외에 사회문화적인 안전의 개념이 있다. 이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거나, 아동이나 노인, 여성 등 대상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그 외 밤거리의 안전성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공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안전, 안전한 양육환경이 도시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홍승아 외, 2007b).

또한 환경의 위기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서구의 경우 유해물질과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환경변화로 인하여 생식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까지 나타나고 있다¹²⁾. 따라서 식품안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 기후변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등의 문제로 이슈를 확대하고 여성적 관점에 기초한 대안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 코펜하겐의 자전거 유모차

자료: 중앙일보.2008.4.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53092

1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임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Margaret Atwood의 "The Handmaid's Tale"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희소가치가 된 가임여성을 국가가 통제하여 인구재생산을 유지하게 된다는 끔직한 미래사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2) 생활방식(life style)의 변화: 소비자로서의 의식과 행동

현재의 성별분업체계 하에서 여성들은 가족내에서 세대간(노인부양과 아동양육), 세대내(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재생산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지역사회에서 소비와 재생산영역을 통해서 주로 수행된다. 특히 가족영역은 여성들이 가족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영역이어서 여성의 기본적인 생활과 노동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성들의 시간사용, 공간사용, 그리고 타인을 보살피는 배려(altruism) 등은 여성들이 환경과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Mellor, 2006).

여성들은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환경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소비자의 역할은 단순한 물품구매자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를 넘어 소비생활 운동을 통해 생활문화의 변화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Grover, etc., 1999) 환경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선, 소비자로서 여성들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녹색소비는 환경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며,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식과 관심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녹색소비자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족이 먹는 식품에 대한 안전에서부터 사회, 정치, 문화, 환경, 교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아주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서 녹색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힘과 책임성이 중요하다¹³⁾.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을 통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세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3) 영국에서는 “Labour Behind the Label”(LBL) 연합체를 형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노동조건하에서 생산된 의류를 구매하도록 캠페인(Campaign for Fair Clothes)을 벌였다. LBL에 따르면 전세계 의류생산의 90%는 여성노동자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압력을 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Mellor, 2006).

<표 2>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의 의식과 행동

	전체	남성	여성					
			20-29	30-39	40-49	50-59	60	60이상
손씻을때 종이타월을 사용하지 않는다	61.4	56.3	66.1	48.8	55.9	59.9	69.8	70.2
배수구에서 쓰레기를 씻거나 기름을 버리지 않는다	57.6	48.4	66.1	40.5	52.7	57.8	63.9	69.8
사용하지 않는 전기불을 끈다	42.6	40.4	44.6	29.8	40.9	37.0	44.4	60.3
종이컵이나 종이냅킨을 사용하지 않는다	40.4	34.9	45.5	32.5	33.1	38.6	46.9	49.5
냉난방장치를 적정온도에 맞춘다	37.1	33.8	40.1	29.4	30.6	32.4	46.0	46.4

자료: Sumito-Life Research Institute Survey(1996). "Consumers Awareness and Behavior Concerning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Impact on Corporate Business Strategy in Japan". Gorver, et.al., 1999에서 재인용

첫 번째 예로는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수행한 소비자 의식과 행동, 그리고 이것이 기업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환경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환경에 대한 책임과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행동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체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환경문제를 "위기"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인식을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행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예로는 우리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공동육아와 생협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 그리고 아이돌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역사회의 안전한 양육문화, 안전한 먹거리 문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등으로 발전했다(홍승아 외, 2007a). 생협운동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경쟁적이고 이윤추구적인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의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돌봄과 신뢰, 그리고 협동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이들 일련의 변화들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여성과 가족의 삶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모델이 된다.

세 번째 예로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운동¹⁴⁾을 들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운동은 지구화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경제 체계에 대한 우려로부터 식품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식품은 대량생산되어 지구의 반을 돌아서 운송되어온 상품의 가격이 지역산품보다 더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는 뉴질랜드산 사과가 프랑스산 사과보다 더 저렴하고, 잿소의 나라 몽골의 상점선반에 유럽산이 더 많이 쌓여 있는 현실이 대량생산과 장거리수송의 식품문화를 실증하고 있다¹⁵⁾. 또한 채 익지도 않은 시퍼런 토마토를 트럭이나 비행기로 수송하면서 익지로 익힌 다음 소비자에게로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뿌리게 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식수를 사용하여 식수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노르베리-호지, 1991).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사먹는 운동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은 장거리 수송되어온 식품보다 더 신선하고, 장기간의 유통을 위해 첨가되는 방부제와 인공 화학물질,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장호르몬 등이 덜 들어 있어서 더 안전하다. 여기에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얼굴 없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까지, 즉 인간적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시에 지역 사회내 '윤리적인 환경친화 소비주체'가 되는 여성과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방식 변화운동은 가족의 삶에 침투해 있는 생산, 소비, 소통의 지역망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대안경제를 창출하고, 또한 지역성을 회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활양식의 변화는 지역문화, 지역정책, 지역경제의 상호연결 고리를 통해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녹색성장정책은 환경과 경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가족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각 영역에서는 각각의 핵심 요소로 환경의 영역에서는 녹색기술과 에너지의 개발, 경제의 영역에서는 녹색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역에서는 (여성 및 가족의)안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4)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산지에서 식탁까지' 수송되는 거리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이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주장이다(김태곤, 2002)

15) 일본에서도 2004년 아오모리현 중학생들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운반거리를 조사한 바 있었으며, 이 조사는 그해 전국 프리젠테이션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후 많은 학교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환경교육의 소재로 삼고 있다(문승식, 2009).



<그림 6> 녹색성장정책의 범주

4. 결론을 대신하여: 지구화시대 다시 지역으로

이제 녹색성장정책은 환경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공통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지구적 논의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하며, 성평등한, 인간적인 발전전략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환경친화, 경제발전, 성평등이라는 세가지 원칙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녹색성장정책이 추구하는 기술 및 에너지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관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발전의 과정에 젠더를 통합시키는 GAD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 및 에너지의 개발과 일자리창출과정의 일부분에 여성을 단순히 “부가”(add-on)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능한 기술과 에너지,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여성들에게 특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여성들에게 기회와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GAD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더를 통합하여 새로운 정책 틀을 기획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녹색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이 가장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사회는 개인과 여성,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장(場)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별분업체계 하에서 여성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컨대 여성은 생활세계를 담당하고 있어서 생활공간과 생활방식에

대한 변화와 주도권을 보다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욕구와 관점, 경험에 기반하여 여성이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으며(올리히 벡, 1999), 그것의 목표는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과의 공존이 될 것이다. 지역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충족적인 삶의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은 친환경적이며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자립도시, 자족도시를 추구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교육자족도시, 육아자족도시, 지역경제에 기반한 경제자족도시 등의 다양한 실현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생활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자율적인 참여의 공간과 사회연대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생활문제를 정치화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신뢰와 소통,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Putnam, 1995)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정책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여성들이 동감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전반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동시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해법은 여성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변화에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녹색성장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경우 녹색성장정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12호
- 강선미(2009). “오바마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 여성신문. 2009.1.30
- 기아리니, 오리오, 파트릭 리트케(1997). 『노동의 미래: 로마클럽보고서』 동녘
- 김승택(2008).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김양희(2007).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곤(2002).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의 개념과 의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동부(200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Green Job)”. 노동부 고용정책브리프. 2008.8.13
- 노르베리-호지, 헬레나(1991).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 라이너스, 마크(2009). 이한중역.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 돌베개
- 모저, 캐롤린(1999). 장미경외 역.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문순홍(2001).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아르케
- 문승식(2009). “장바구니로 지구를 구하는 법”. 대한민국 정책포탈 사이트(<http://www.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2008).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 박용남(2007). 『꿈의 도시 꾸리찌바』 지속가능도시연구소
- 백, 올리히(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 이창훈(2008). “선진국의 녹색성장”
- 장우주(1998).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과제”.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 제인 구달(2005). 『희망의 밥상』 사이언스북스
- 최병두(1999).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 프리드먼, 토마스(2009).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봄비는 세계』 21세기 북스
- 홍승아·김혜영·류연규(2007a).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김혜영·류연규·相馬直子·조순주·진미정(2007b).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주석(2002). “마을로 들어가기, 마을에서 대안만들기”. 『녹색평론』 63호
- Borup, M. (2004). "Green Technology Foresight as Instrument in Governance for Substantiality". in Jacob, K. et al. (eds.) *Governance for Industrial Transformation*
- Boserup, E. (1970). *Woma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N. Y. :St Martins Press

- Cecelski, E. (2000). "The Role of Women i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German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Cleary, J. & A. Kopicki(2009). "Preparing the Workforce for a 'Green Jobs' Economy.
John J. Heldir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 Research Brief.
February 2009
- Corner, L. (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 Grover, S. et al. (1999). "Gender and Sustainable Consumption". *Bridging Policy
Gaps in the Context of Chapter 4, Agenda 21 "Chang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UNED Forum
- Mellor, M. (2006). "Ecofeminist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
Economics*. 1(1/2)
- Pollin, R. (200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정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 UN ESCAP(2006). Green Growth at a Glance
- Voydanoff(2001). "Conceptualizing communit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and Family. 4(2)

<부록 1> 지역발전계획에서의 젠더관점 강화사례

독일 하이델베르그시는 ‘도시발전계획 2010 프로젝트’에 여성이 참여를 강화하고 여성의 관심을 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 워크샵’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미래 워크샵’에는 14개 읍단위에서 25~50세의 여성 117명이 참여하였는데,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여성들에게 적합한 중간규모의 1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단위에서 진행되었다. 워크샵 중에는 전문 유아교사가 지원되어 자녀를 돌보았다.

워크샵의 결과는 여성국에 보고되었으며, 워크샵에서 나온 여성들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발전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청소년과 노인, 여성을 위한 센터의 설립, 녹지공간의 확대,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정치문화의 변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마련, 마을간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책 등이다. 하이델베르그시는 개개 읍의 여성그룹들을 미래 워크샵을 통해 키워내고 이들의 에너지를 지역공동체 정신에 적극 연결시킴으로써 도시발전에 여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 문순홍, 2001

<부록 2> 아시아국가들의 에코라벨(Eco-Label)

국가	에코라벨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인도	Ecomark
일본	Ecomark
말레이시아	Product Certification Programme
한국	Environmental Labelling
싱가포르	Green Label Singapore
태국	Thai Green Label

자료: ESCAP, 2006

<부록 3> 식품의 이동거리

음식, 연료, 고속도로

아이오와주에 있는 ‘자연친화적인 농업을 위한 레오폴드센터’에서는 미국 농무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토대로 시카고 터미널 마켓에 들어오는 식품들의 운송거리와, 샌프란시스코 페리 플라자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에 들어오는 인근지역 생산식품들의 운송거리와 비교하였다

	시카고 터미널 마켓 (평균 이동거리)	샌프란시스코 페리 플라자 파머스마켓 (평균 이동거리)
사과	약 2,488 킬로미터	약 168 킬로미터
토마토	약 2,189 킬로미터	약 187 킬로미터
포도	약 3,429 킬로미터	약 242 킬로미터
콩	약 1,226 킬로미터	약 162 킬로미터
복숭아	약 2,678 킬로미터	약 237 킬로미터
겨울호박	약 1,250 킬로미터	약 157 킬로미터
샐러드용 입채소류	약 1,422 킬로미터	약 158 킬로미터
양상추	약 3,288 킬로미터	약 163 킬로미터

자료: 제인 구달 (2001)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¹⁾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현대사회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독특한 위험에 직면한 ‘위험 사회’(Risk Society)라는 논의는 서구를 배경으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생활의 중심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가치였고, 계급 갈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었다. 하지만 후기 근대로 특징 지워지는 오늘날에는 경제적 풍요로움만큼이나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더불어 안전한 삶의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스티븐 마일스, 2003). 그러나 위험사회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발전의 맥락 속에서 ‘위험’의 개념과 현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²⁾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사회는 국가의 주도로 압축적 성장을 경험한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세계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요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safety)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의 기본개념은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개개인이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계획된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와 행동 뿐 아니라 구조적

1) 이 연구는 2008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수시과제로 수행된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에 참여하였던 연구진(장미혜, 윤덕경, 안상수, 김영택, 이승훈) 공동의 연구성과물임을 밝혀둔다.

2) 지난 2008년 4월 방한하였던 대표적인 위험사회 이론가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에 대하여,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 사회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 온 위험 사회보다 더 심화된 위험 사회다. 전통과 제1차 근대화 결과들,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들, 제2차 근대화가 중첩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 사회인 것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위험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건·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8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인식 하에 국무총리실의 업무로, 사회위험 및 갈등 관리기능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 :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는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위험이 모두 포괄되나 이 중 사회·경제적 위험, 재해·재난 위기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위험관리 대책의 목표는 시급성·중요성·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험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역시 사회의 일부 성원들에게는 다른 성원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정화기 회사가 돈을 벌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공기 오염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위험 요소들이 시장 체계로 내부화됨으로써 여전히 더 잃는 사람들과 더 얻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사회의 약자들은 아무래도 사회의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 피해도 더 심하게 입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위험한 환경이나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도 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56.9%가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여성의 절반 가까운 46.6%의 여성이 ‘운전시 차선변경이나 서행운전을 하였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협이나 야유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장미혜 외, 2008). 여전히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 것이다. 이 이유로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가정 밖의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 교통사고, 인위적 재난 등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인권 및 권리 의식의 향상은 과거 문제시되지 않았던 상황이나 환경들까지도 여성들에게 ‘위험’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여성의 위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여성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설정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이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이란 포괄적인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때 안전의 대상이 되는 생활환경의 범위는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과 이웃으로부터 보다 넓게는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익산시, 서울시, 세종시, 김포시 등의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범죄 위협이 없는 환경이다. 일찍이 Rainwater는 거주지가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지정한 바 있다(김홍순, 2007: 36). 하지만 도시 환경이라는 배경 속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를 분석하고 있는 경험적 연구 또한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³⁾

Gordon(1980)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도시에서의 범죄나 야간활동 등에 대하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결국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밤 시간에 걸어다니는 것을 자제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다니거나, 걷기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주차공간을 선별하여 주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홍순, 2007: 37). 이는 위험 노출 작용을 피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범죄율과 공포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포의 정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실제 범죄율은 높지 않게 나타난다거나,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공포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율은 남성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김홍순, 2007: 37).

한편 포괄적인 시각에서 생활공간을 바라볼 때, 도로나 건물로 구성된 물리적 공간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투입과 산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생태학적 순환구조를 가지며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balanced ecocycles) 유기체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유럽의 연구들에서는 환경체계(ecosystem)로서의 도시가 강조된다. 소비의 무분별한 팽창이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듯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남용과 환경오염의 증대 혹은 환경의 파괴에 대한 숨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로 된 도로와 자동차로 혼잡한 도심이 아니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에서 발간한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김홍순(2007)의 연구,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통계연보」(2007)에서 조사한 여성의 안전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이 있을 뿐이다.

라 생활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하게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여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생활공간 내에서의 자연환경으로 조성된 공간의 의미와 이것이 사적 영역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복지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은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간이나 지역정책이 “성장지향적 정책노선으로 말미암은, 과잉도시화 및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도시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면, 미래의 도시 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녹색 도시는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불평등이 없는 도시 구조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여성친화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영혜·손덕순, 2007: 1). 이들은 여성친화적 도시의 구성요소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시설·구조적인 영역’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건강·환경 영역’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영혜·손덕순, 2007: 6). 이 가운데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서야 여성친화적이며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최근의 관심사에 부응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생활공간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2. 젠더관점에서 바라본 안전한 생활공간

근대 산업사회 이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면서 도시 공간의 형태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유되고 통제되어 왔다. 가부장적 관념, 지배 체제와 권력 구조, 성(性) 역할의 고정화에 따른 남성의 경제권 독점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또한 건물 형태의 미적·사회적 가치, 건물을 만드는 과정, 건물의 소유와 사용까지도 남성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차은아, 1999).

또한, 여성의 시각으로 여겨 왔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해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시각은 배제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여성의 편의를 배려하여 여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의 저변에는 ‘당연한 여성의 임무’라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에 관한 불합리한 편견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가정과 사회활동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자연스럽게 사적인 주거영역은 여성의 영역으로, 공적인 사회영역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영역의 구분은 도시와 주거공간의 설계를 양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도시공간과 활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적 공간과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여성이나 약자의 견해가 배제된 채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이 감수해야 할 불편한 공간적 체계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의 생활 무대인 도시 대부분의 공간계획은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 공간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통용되고 있는 ‘휴먼 스케일(human scale)’은 인간이 쾌적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단위를 일컫는 말로서 원단위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치수인 평(3.3m²), 자(=척(尺)), 서양의 인치(inch), 피트(feet) 등은 모두 인체의 치수와 인간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습에 의한 척도들이다. ‘평’은 성인 남성이 양팔을 벌리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크기, ‘자’는 손을 뻗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인치’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의 길이, ‘피트’는 12인치의 발 크기를 가진 영국왕 헨리 1세의 발을 표준화 한 신체 치수에서 유래하였다.

즉,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공간의 기본적인 단위 자체가 성인 남성에게 그 기준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시각에서 조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영역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시각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Karen A. Frank⁴⁾는 여성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다양한 도시 및 주거계획들을 여성학적 틀을 이용해 연관성과 포괄성, 보살핌의 윤리와 일상적인 삶의 가치, 주관성과 감정의 중요성, 복잡성과 가변성의 4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Karen A. Frank에 의한 범주는 남성위주로 형성된 기존의 사회의 시각에 균형감을 부여하고 여성성이 가지는 가치를 도시 및 주거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표 1> 참조).

4) Karen A. Frank, "A Feminist Approach to Architecture : Acknowledging Women's Ways of Knowing"

<표 1> Karen A. Frank에 의한 도시/주거계획의 여성학적 접근

<p>연관성과 포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론적 사고에 의한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성, 복합성, 변화에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카테고리를 제시 -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단순 이분법은 여성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과 이를 지원해주는 공간들 사이의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분리되어 있는 활동들을 ‘공간적 근접성’으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들에 관심(Susan Saegert, Ann Markusen, Linda McDowell, Suzanne MacKenzie와 Damaris Rose) - 교외 주택들을 커뮤니티로 재구성하여 개인/공공 공간의 분리를 감소시키고 사회활동, 임금, 노동, 가정에서의 생활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40개의 안을 제시(Hayden) - 거주자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공공영역을 통한 커뮤니티들이 공적/사적 영역간의 분리를 감소(Piercy)
<p>보살핌의 윤리와 일상적인 삶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살핌의 윤리와 일상적 삶의 가치는 여성들에 의해 제안되는 대안 공동체의 특징으로 나타남 - 추상적 개념의 기하학적 도시 재건 계획들을 비판하고 대규모, 단일 용도의 슈퍼 블록 개발로 인해 일상의 활동과 요구가 무시된다는 것을 지적(Jane Jacobe)
<p>주관성과 감정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사랑, 노여움, 갈등과 우울함들이 모두 최대한 솔직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짐 -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이며 친밀하고, 서로 보살펴주는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발견(Piercy의 유토피안 커뮤니티)
<p>복합성과 가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친밀감 부족의 원인은 간결함을 단순화로 대체했기 때문임(Eileen Gray) - 건축에서의 여성적 원리로서 ‘복합성’ 강조(Magrit Kennedy) - 복합성과 모호함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므로 바람직한 디자인 특성이라고 간주(Sheila De Bretteville) - 개방형 아파트 디자인에서 가변성과 변화에 대한 예측(Lilly Reich) - ‘House of Meanings’를 매트릭스와 같은 공간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창조적인 다기능의 공간들을 통해 이분법을 극복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완성된 공간들을 결합(Torre)

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도시환경설계의 흐름

양성평등의 개념은 1994년 OECD의 ‘여성과 도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96년 이스탄불에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2), 1998년 세계지방자치단체협의회(IULA) 등을 통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한국여성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양성평등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념과도 결부된다.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접근에 있어 경제력이 약한 노약자나 여성의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캐롤린 모저는 젠더 설계의 원칙으로 젠더 역할, 젠더 요구, 가구 내에서 여성이 동일한 자원과 의사결정 권력을 갖도록 보증하는 ‘가구 내 자원 할당’, ‘역할의 균형화’, ‘역할과 요구간의 관계’, ‘설계과정에서의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설계과정부터의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캐롤린 모저, 2001).

우리나라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입안단계부터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격차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여성의 시각에서 본 생활환경

기존의 남성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생활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생활환경을 논하고 있다.

Jane Jacobs는 도로와 보도가 도시의 주요한 공공 장소이자 가장 생동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블록의 길이를 짧게 하고 도시의 분리된 용도 지역제를 변화시켜 ‘지켜보는 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 공간 구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주거지역의 고립과 위험을 지적하면서 주거와 다른 용도와의 복합적인 구성을 통해 공간을 통한 자연스러운 안전의 확보를 주장하였다. 또한 주거블록의 길이를 짧게 계획하여 고립되고 위험한 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였다(Jane Jacobs, 1961).

‘지켜보는 눈’의 원리와 중요성은 이후 도시 곳곳에서 적용되었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관계에 치중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는 오히려 인적을 뜸하게 함으로써 위협적인 공간

으로 인식된다. 또한 그동안 용도지역제에 의한 주거·상업·녹지 등 인간 활동과 밀접한 공간들의 분리는 효율성과 쾌적성의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처럼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시각에서 이러한 공간의 분리는 이동거리를 증가시키고, 이동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소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지켜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지는 공적 공간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업무지역의 경우 형성될 당시부터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남성위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공간점유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인식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도심의 상업공간의 경우도 의류나 식료품 등의 구입, 문화 활동 등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이용에 제약요인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의 경우 상업지역의 좁은 보행로는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걷기가 훨씬 불편하며, 낮은 턱조차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여성은 어린아이를 동반하기를 꺼리게 되지만, 잠시 동안 위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많지 않다.

3.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 실태

가.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조사결과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는 2008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지역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성별과 연령의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19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성별할당은 조사의 목적이 여성의 안전의식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표본수 할당에 있어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을 2:1로 배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이며,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조사 표본은 남성 400명, 여성 800명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설문은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질문을 5점 척도로 나누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어느 정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인터넷 상의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유출, 주차공간, 자녀의 음란물 노출, 자녀의 유괴와 관련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위험을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아닌 본인과 관련해서 생활환경 속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여성=3.96점)이었다. 다음으로는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여성=3.85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여성=3.79점),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여성=3.70점) 순으로 여성 응답자들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남성응답자들의 점수가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남성=2.72점),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남성=2.38점),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남성=2.53점) 등으로 보통(3점)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여성=2.90점)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여성은 '보통이다'(3점)보다 점수가 높아 남성보다 심야시간, 혼자 다니는 것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두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다.

<표 2>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성별 간 평균비교(5점척도)

구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남성	400	2.375 (1.097)	-16.929***
	여성	800	3.479 (.998)	
	전체	1,200	3.111 (1.155)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남성	400	2.720 (1.140)	-19.240***
	여성	798	3.961 (.853)	
	전체	1,198	3.547 (1.123)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남성	400	2.258 (.974)	-21.613***
	여성	800	3.541 (.968)	
	전체	1,200	3.113 (1.143)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남성	399	2.529 (1.070)	-20.999***
	여성	800	3.853 (.940)	
	전체	1,199	3.412 (1.166)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남성	400	2.803 (1.132)	-15.041***
	여성	799	3.787 (.930)	
	전체	1,199	3.459 (1.104)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남성	399	3.198 (1.181)	-1.591
	여성	794	3.311 (1.146)	
	전체	1,193	3.273 (1.159)	

구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남성	400	2.565 (1.133)	-4.825***
	여성	797	2.896 (1.090)	
	전체	1,197	2.785 (1.115)	86.399***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진다	남성	400	2.765 (1.036)	-15.115***
	여성	797	3.700 (.956)	
	전체	1,197	3.388 (1.077)	108.791***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남성	400	2.708 (1.084)	-6.182***
	여성	799	3.113 (1.042)	
	전체	1,199	2.977 (1.073)	96.117***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남성	376	3.210 (1.185)	-0.375
	여성	600	3.238 (1.077)	
	전체	976	3.227 (1.119)	90.083***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 이 꺼려진다	남성	400	3.223 (1.080)	-5.530***
	여성	796	3.577 (.971)	
	전체	1,196	3.458 (1.022)	116.986***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남성	227	4.048 (1.027)	0.451
	여성	557	4.011 (1.075)	
	전체	784	4.022 (1.061)	106.182***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남성	195	3.979 (1.000)	-1.400
	여성	429	4.096 (.941)	
	전체	624	4.059 (.961)	105.567***
자녀가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남성	194	3.959 (.997)	-1.742†
	여성	429	4.105 (.957)	
	전체	623	4.059 (.971)	104.317***

† p<.10, * p<.05, **p<.01, ***p<.001

그 다음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14가지 문항에 대해서 범주화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4개 범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으며 이 세 가지의 요인으로 14문항 전체의 약 64%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요인 2는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의 범주로, 요인 3은 ‘환경이나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요인이 구분되는 기준은 생활환경의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이 그 대상 별로 나뉘어 짐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 진다’ 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요인분석결과(Varimax Rotation)

변 수	요인적재값			공통성 (communality)
	요인 1	요인 2	요인 3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824	.099	.119	.703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836	.128	.138	.734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858	.086	.106	.755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873	.119	.107	.787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773	.181	.177	.661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 진다	.650	.156	.389	.597
인터넷 상에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두렵다	.371	.406	.345	.421
자녀가 음란물에 노출될까 걱정된다	.094	.825	.112	.701
등하교길에 자녀가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된다	.130	.843	.136	.746
자녀들이 학교급식에서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 걱정된다	.141	.842	.121	.743
음란 동영상이나 스팸문자(메일)를 받을까봐 두렵다	.429	.267	.446	.455
계단이나 보도블록, 보도의 높은 턱 때문에 보행하기가 불편하다	.223	.019	.711	.555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좁아서 주차하기 힘들다	.012	.118	.807	.666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 꺼려진다	.201	.334	.523	.425
고유치(Eigenvalues)	5.789	1.980	1.182	
분산설명(% of Variance)	41.351	14.141	8.443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14개 문항을 요인별로 하위 척도로 묶었을 때의 각 요인별 Cronbach의 α 값을 살펴보면, 제1요인인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의 6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제2요인인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의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79였으며, 제3요인인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의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별로 성별에 따른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자녀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반면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여성은 도시공간에서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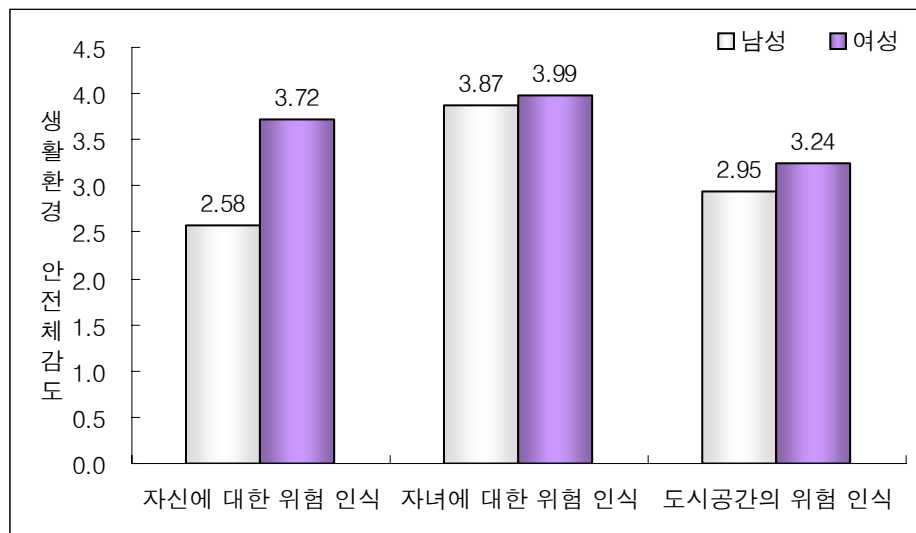
다음은 주요 독립변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1, 요인 2, 요인 3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표이다. 이와 같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간의 대략적인 방향과 관계를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인 간의 상관분석은 제외하였다. 요인 1, 즉 자신에 대한 위험인식은 성별, 연령, 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여긴다. 요인 2, 자녀에 대한 위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의 정도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4> 주요독립변수 및 위험인식요인 간의 상관분석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
성별	1				
연령	-0.048 [†]	1			
결혼상태	-.170 ^{***}	.617 ^{***}	1		
교육수준	.163 ^{***}	-.656 ^{***}	-.322 ^{***}	1	
소득	0.055 [†]	-.304 ^{***}	-.108 ^{***}	.447 ^{***}	1
요인1(자신)	-.586 ^{***}	-.120 ^{**}	-	-0.028	0.076 [†]
요인2(자녀)	0.028	-.306 ^{***}	-	.194 ^{***}	0.081 [†]
요인3(환경도시공간)	0.016	-0.036	-	.111 ^{**}	0.047

[†] p<.10, * p<.05, ** p<.01, *** p<.001



<그림 1>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고, ‘자신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생활 속에서의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위험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여성은 도시 공간에서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시간대 및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

다음은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여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낮보다는 심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대낮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공간은 옥외 공공주차장, 지하주차장, 택시, 기차역/버스터미널, 지하도, 공원이나 야외, 야산 등 열거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의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야의 남녀의 안전체감도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대낮(3.649점)과 심야(2.636점)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심야의 경우에는 11개의 모든 공간의 안전체감도 인식에서의 성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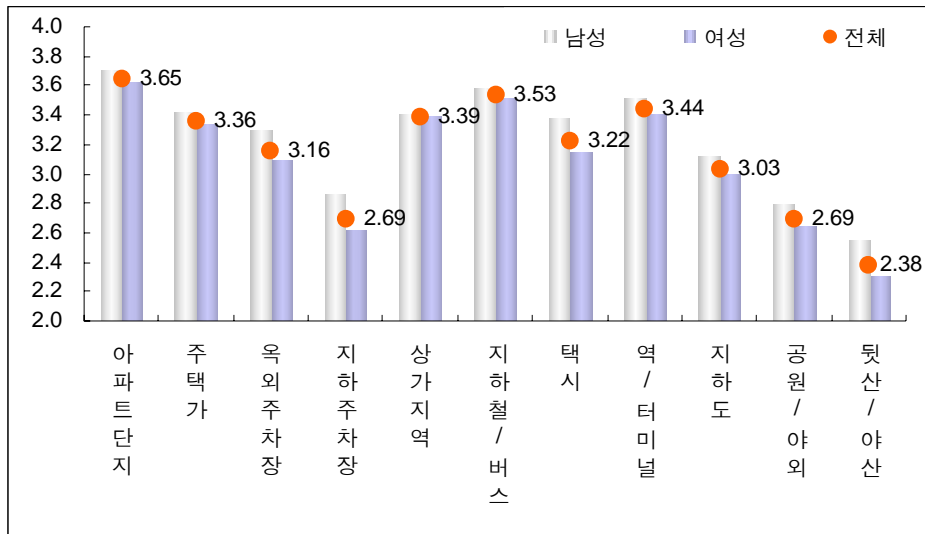
<표 5> 시간대 및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차이(평균비교)

구분		대낮			심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아파트 단지	남성	400	3.703 (0.816)	1.569	399	2.815 (0.949)	4.507***
	여성	797	3.622 (0.869)		797	2.547 (1.005)	
	전체	1,197	3.649 (0.852)	148.144***	1,196	2.636 (.994)	91.718***
일반 주택가	남성	399	3.414 (0.909)	1.460	400	2.528 (0.955)	4.692***
	여성	797	3.332 (0.903)		800	2.255 (0.945)	
	전체	1,196	3.360 (0.905)	128.336***	1,200	2.346 (.957)	84.937***
옥외 공공주차장	남성	399	3.293 (0.903)	3.520***	399	2.471 (0.926)	5.936***
	여성	796	3.090 (0.957)		795	2.135 (0.920)	
	전체	1,195	3.158 (0.944)	115.699***	1,194	2.247 (.936)	82.997***
지하주차장	남성	399	2.857 (0.988)	3.996***	400	2.083 (0.915)	4.657***
	여성	797	2.614 (0.997)		797	1.832 (0.859)	
	전체	1,196	2.695 (1.000)	93.172***	1,197	1.916 (.886)	74.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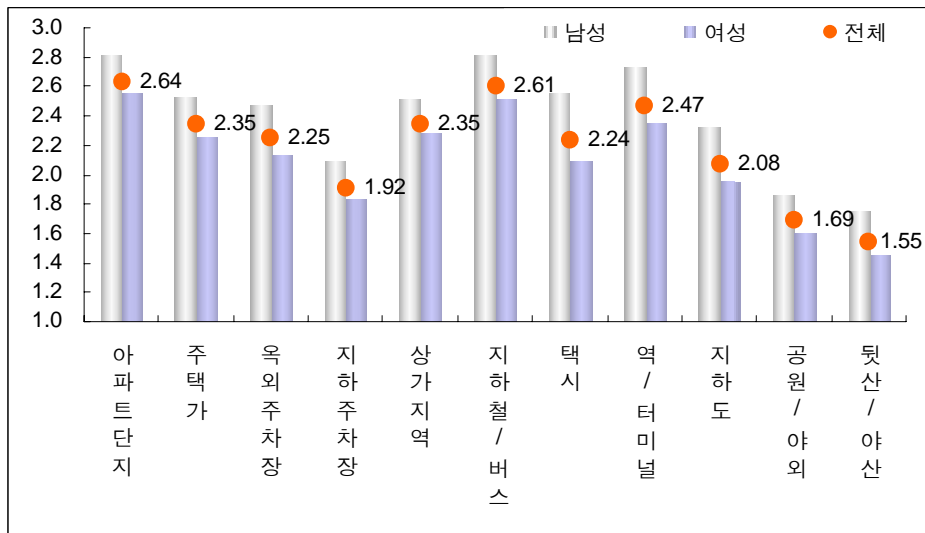
구분		대낮			심야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재래시장 근처의 상가지역	남성	400	3.405 (0.871)	0.351	399	2.504 (0.862)	4.221***
	여성	798	3.386 (0.891)		797	2.279 (0.874)	
	전체	1198	3.392 (0.884)	132.808***	1,196	2.354 (.876)	92.901***
대중교통수단 내부	남성	398	3.583 (0.844)	1.459	399	2.810 (0.937)	5.248***
	여성	799	3.507 (0.852)		800	2.508 (0.943)	
	전체	1,197	3.532 (0.850)	143.778***	1,199	2.608 (.951)	94.947***
택시	남성	400	3.370 (0.883)	4.055**	400	2.545 (0.965)	7.933***
	여성	800	3.148 (0.902)		800	2.086 (0.903)	
	전체	1,200	3.222 (0.902)	123.757***	1,200	2.239 (.948)	81.791***
기차역, 버스터미널	남성	400	3.505 (0.801)	1.983*	400	2.725 (0.895)	6.987***
	여성	798	3.405 (0.837)		797	2.344 (0.888)	
	전체	1,198	3.438 (0.826)	144.052***	1,197	2.471 (.908)	94.150***
지하도	남성	397	3.116 (0.914)	2.179*	398	2.324 (0.922)	6.650***
	여성	792	2.990 (0.953)		795	1.957 (0.851)	
	전체	1,189	3.032 (0.941)	111.059***	1,193	2.080 (.892)	80.569***
공원이나 야외	남성	400	2.783 (0.950)	2.384*	398	1.862 (0.857)	5.256***
	여성	800	2.641 (0.002)		800	1.601 (0.783)	
	전체	1,200	2.688 (0.987)	94.377***	1,198	1.688 (.817)	71.493***
동네 뒷산 (야산)	남성	400	2.540 (1.035)	3.760***	400	1.748 (0.855)	5.974***
	여성	800	2.301 (1.038)		800	1.450 (0.723)	
	전체	1,200	2.381 (1.042)	79.116***	1,200	1.549 (.782)	68.630***

* $p<.10$, * $p<.05$, ** $p<.01$, *** $p<.001$

위의 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낮 시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와 심야시간대의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야 모두 아파트 단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및 버스의 내부,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공간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안전체감도에 있어서 성별간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택시,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등의 지하도 그리고 옥외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으로, 이들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이나 안전도는 여성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2> 대낮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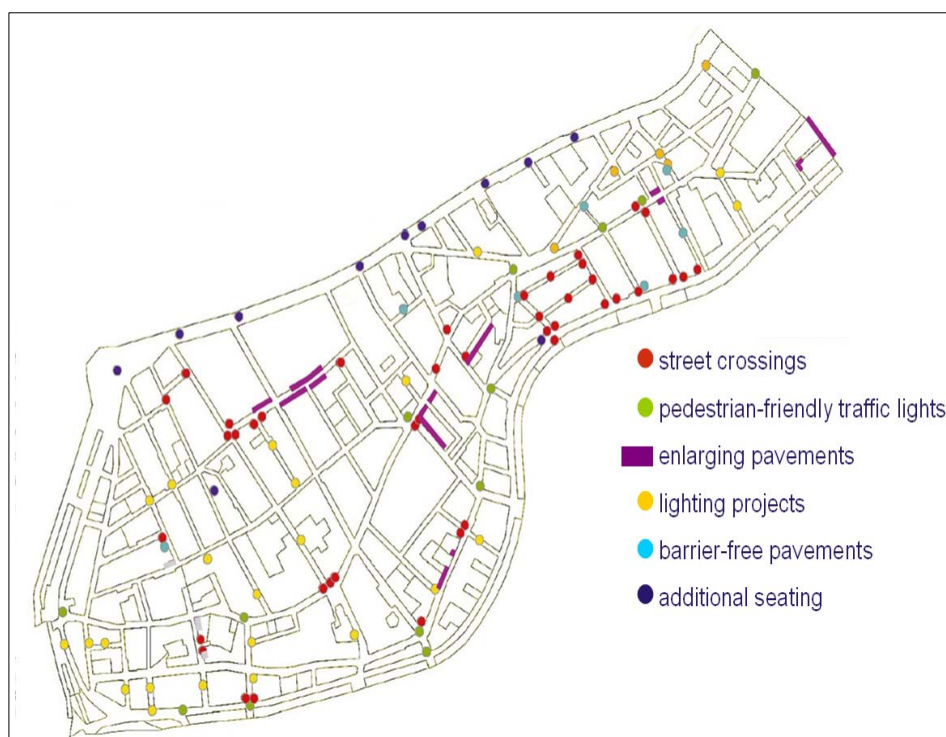


<그림 3> 심야시간대 생활 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 비교

4. 해외사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의 예

마리아힐프 자치구는 비엔나시의 중심부에 인접하여 가로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약 28,000여명이 거주하는 1.5km² 규모의 구로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마리아힐프는 먼저 공간 정책의 성 주류화를 ‘남녀, 소년과 소녀에게 도시공간에서의 형평한 기회 제공’이

라고 설정하고 도시생활에 대한 성별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한 모든 부서에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성별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은 도시의 교통(보행,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4> 마리아힐프 성 주류화 시범구역의 사업시행 현황

마리아힐프(Mariahilf) 자치구의 성 주류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가로는 차량위주로 공간분할 및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유모차와 유아를 동반한 보행자를 고려하여 보도의 폭원을 2m이상으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보행로 중간보다 가각부의 턱이 약자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착안하여 가각부를 보행로 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도시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범사례의 구상과 계획이 단기간에 걸친 즉흥적인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오랜시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친 신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교통신호등

Barrier-free 포장

보도 확장(2m 이상)



이동이 편리하도록 세심한 가각부의 연결

마리아힐프의 보행자전용도로 계획도로

<그림 5>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끝으로 여성안전과 관련된 여성정책은 사회 저변의 인식의 변화와 적응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홍보와 시민 한사람 한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 표지판의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비엔나시에서는 양성평등 표지판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꿔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양성평등 표지판은 수유시설, 교통시설표지판, 전철의 좌석안내 표식, 자전거 전용도로 표식 등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캠페인 내용을 담은 귀마개, 호루라기,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50세 이상~65세 이하의 여성계층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교육정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그림 6> 양성평등 표지판 사례



<그림 7> 여성을 위한 안전용 호루라기와 여성차별적 행위를 지양하는 귀마개

5. 그렇다면 대안은?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이 느끼는 불필요함을 개선하고, 여성만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 또는 노인, 어린 아이 혹은 빈곤층 등 지역사회 내의 어떠한 구성원도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제외되

지 않는 포괄성의 원칙이야말로 향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女幸 프로젝트)’, 김포 신도시의 ‘여성친화적인 신도시 건설’, 세종시의 ‘여성친화 행정도시’, 전라북도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시책 등의 사례는 이미 여성을 위한 안전과 여성을 배려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원하는 생활공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친화적인 녹색 생활공간은 좀 더 인구밀도가 낮아 쾌적하고, 보육시설이나 일터가 인접해 있어 기존의 직장과 일터가 분리된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임근, 노동, 가정에서의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녹색공동체의 요소 중 하나로 재활용재료로 만든 녹색건물(Green Building)⁵⁾의 확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숲이나 공원과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이 보존된 지역이 주거지에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이동 거점이 확보된 생활공간에서 사람들은 손쉽게 혼잡한 도심이나 주거지역을 벗어나 숲이나 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인구과밀지역과 희박지역은 서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전통적인 양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휴일이나 휴가기간의 여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자연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연이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생활공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채광이 되면서 밝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리,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 공간,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내의 다른 이웃들과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조성된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단순히 공간과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너무 폐쇄되어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이나 유괴나 납치 등의 각종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반개방된 공간이나 울타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나지막한 나무로 만들어진 녹색 울타리(green walls)가 조성된 가로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간 내에서의 거점과 거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면서 가능한 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중요하다. 직업을 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일터와 가족 사이를 이동해야 하고, 돌봄 노동을 대부분 담당해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이동하거나 노인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전 세계 에너지의 약 40%는 주거용, 상업용 및 공공 건축물의 건설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물사용을 적게 할 수 있으며, 태양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의 건설은 향후 건축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시, 자동차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동거리를 좁혀주거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이동사건을 단축시켜주는 것은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특히 심야시간대의 이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동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정류장에 도착하는지를 실시간 알려주는 안내판의 설치나,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짐이나 유모차를 손쉽게 실을 수 있도록 턱이 낮은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현재와 같이 석유의 대량소비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모적이면서 반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서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아름답고 쾌적한 보도(걷고 싶은 길)의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성들의 이동의 편의성은 증대시키면서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재정비는 국가적인 수준보다는 이동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좁은 범위의 정책단위, 다시 말해서 생활공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짧은 구간 사이의 거점을 늘려가서 자전거로 이동시 오히려 이동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망이 재편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내 거점(spatial connections)들을 늘려 모든 지역사회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생활공간의 변화는 신도시의 건설과 같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오랜 시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동 등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도시공간에서의 형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생활에 대한 성별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한 모든 부서에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 성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영혜, 손덕순(2007), 『경기도 신도시 설계모형(안): 여성친화적 접근』,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김종길(1996), “‘위험사회’에서의 환경문제 발생논리와 환경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학』, 제30집(겨울호).
- 김홍순(2007), “비성별적(非性別的) 도시의 모색: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협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국토계획』, 제42권 1호.
- 노성호 · 김성언 · 이동원 · 김지선(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진철(2004),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 사회』, 2004년 가을호.
- 마일스, 스티븐(2005), 박형신 · 정현주 역, 『현실세계와 사회이론』, 서울: 일신사.
- 신동화(2007),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Risk Communication”, Safe Food vol. 02, No. 2.
-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출판.
- 아동 · 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 『아동 · 여성보호종합대책 실행계획』.
- 여성인권법연대(2007),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7. 2. 8), 여성인권법연대.
- 이건호(2007), “국내 식품위해사건 사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방향”, Safe Food vol. 02, No. 2.
- 이재열(1998), “체계실패로서의 위험사회: 대형사고에 대한 조직사회학적 연구”, 전기사회학대회발표문 요약집
- 이재열(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사회적 안전』,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원홍 · 김영택 · 정현주 · 장정순(2008),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익산시청
- 임현진(2000),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 - 이론적 모색과 경험적 고찰” 『사회과학』, 제39권 제2호.
- 장경섭(1998), “결론: 복합위험사회의 안전권” 『한국인의 삶의 질: 신체적·심리적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미혜 · 윤덕경 · 안상수 · 김영택 · 이승훈(2008),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영실 외(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2001), 『청소년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차은아(1999), “신촌 지역 여대생의 하숙, 자취생활 분석을 통한 여성학적 시각의 도시 주거 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aren, A Frank(1991), 신혜경 역, 「여성학적 접근 방법으로 본 도시 주거 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캐롤린 O.N. 모저(2001), 장미경 외 역,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통계청(2008), 「「008년 사회통계조사결과(교육·안전·환경 부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07),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 - 대(對) 여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2007. 2. 22),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06), 「성폭력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06. 3. 1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제44차 여성정책포럼, 2008.5.21.
- 박선영 · 윤덕경 · 박복순 · 이성은 · 한지영(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2007 여성통계연보」
- 윤덕경 · 김인숙(2006),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심영희 · 김준호 · 최인섭 · 조정희 · 박정선(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hle, Thomas(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pp. 5-20.
- Gordon, M, S., Riger, R. LeBailly and L. Heath.(1980), "Crime, Women, and the Quality of Urban Life," *Signs*. 5(3 supplement): S144-S160.
-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a Great American Cities*, Coleman,
- Johnson J. Renee., and Scicchitano, J. Michael.(2000), "Uncertainty, Risk, Trust, and Information: Public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 28, No. 3
- Morgan, M. Granger.(1995a), "Probing the Question of Technology-induced Risk,"

Theodore S. Glickman and Michael Gough, *Readings in Risk*,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Morgan, M. Granger.(1995b), “Choosing and Managing Technology-Induced Risk,”
Theodore S. Glickman and Michael Gough, *Readings in Risk*,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Oscar Newman(1972), *Defensible-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Institute for Community Design Analysis, Inc.

조선일보(2008),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 2008년 4월 1일

중앙일보(2008a), “교통사고에는 둔감, 인간광우병엔 민감”, 2008년 11월 4일

중앙일보(2008b), “국민 10명중 7명 ‘한국은 아주 위험한 사회’”, 2008년 11월 4일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

녹색성장을 향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전략과 과제¹⁾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근대사회는 과학의 가치와 효능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실제로 과학기술은 근대사회발전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인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기술발전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의 가시감과 속도감에 대한 욕망 또한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가속화된 기술변화로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의성이 증가되어온 만큼, 세계의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 또한 확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빈곤은 위계적이나 스모그는 민주적’이라고 간파한 올리히 벡의 지적처럼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사회이념, 종교,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근대 이후 신앙과도 같은 과학기술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인류의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발발하는 환경재해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Beck, 2006).

한국사회 역시 뒤늦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의 성공사례로 호명될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사회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근자에 들어서는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압축적인 경제성장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또한 대단히 빠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표출하고 있어, 한국사회 역시 위험사회적 특징

1)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에 따르면, 가족친화환경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가족친화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마을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친화환경을 가족친화지역, 또는 가족친화지역사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스피디한 성장주의에 경도된 사회 문화는 삶의 질보다는 수치로 확인되는 외형적 성장을 우선시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생태파괴,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 지역과 친족공동체는 물론 가장 단순한 핵가족마저 뚜렷한 해체의 증후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세계시장주의의 확산과 빠른 기술변화로 노동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의 구성조차 용이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강도 높은 글로벌 경쟁과 자본의 무한확장, 국민국가의 경계를 손쉽게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유동성, 그리고 이로 인한 좁은 구직기회와 빈번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일상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의미와 원리마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Beck, 1997). 요컨대, 시장 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문화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집합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기성의 제도가 개별화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가족의 유대와 결속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의 기피와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불안정성의 증가는 이제까지 가족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돌봄의 기능적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주요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을 회구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인돌봄 등의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사회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국가전략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녹색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친화사회환경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생태계 보호 사이에서 일방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보다는 양자의 동시 추구라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환경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같이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요청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기성의 성별분업이나 세대를 아우르는 미시적 생활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생활정치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가족친화환경조성은 녹색성장의 주요한 수단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지하듯, 가족친화환경은 개인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어린 아동과 노인 돌봄의 권리와 의무를 남녀와 세대는 물론 개별가족을 넘어 전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의 일과 생활세계의 조화, 일과 돌봄 및 여가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생활공간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서비스 인프라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가 관건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요건은 녹색성장의 주요 실천전략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녹색성장의 주요한 실천전략의 하나로서 가족친화환경을 설정하고,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주요 개념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린라이프와 가족친화지역사회

그동안의 성장과 발전, 풍요의 추구에 있어 모든 것은 ‘양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의 지표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러나 삶의 질적 지표인 생태적 지표는 더욱 열악해지면서 삶의 질을 무시한 양적 성장,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경제성장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동안 환경담론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유정길, 1994:279). 이에 90년대를 전후로 환경담론은 크게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 관련한 다양한 법과 제도의 진전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과피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해법으로 마련된 환경관련 법과 제도는 왕왕 경제성장과 대치되거나 특정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성장의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상당부분 유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녹색성장은 생태계 보호라는 수동적인 환경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21세기 주요한 국가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변화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할 정도로 에너지 과다사용과 환경재해는 절박한 지구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은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자 국가 비전으로 설정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지구 존립을 위해서는 성장과 생태계 보호는 반드시 양립되어야 하고 실제로 양립가능하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은 최소한의 자원사용량을 통한 건실한 성장방식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즉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소비대중의 인식제고를 통한 녹색제품의 생활화와 자원절약을 소비차원으로 확대시키는 생활전반의 혁명을 요구한다. 특히 녹색성장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나 신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 생활양식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주민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패러다임이다.

이같은 녹색 생활혁명의 배경에는 녹색소비자의 부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녹색 소비자들이야말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생산과 유통방식을 만들어 내도록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감시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녹색소비자 운동 에코맘(ecomam)은 미국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가사나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녹색어머니들이다. 이들은 지역단위 혹은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12).

이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새로운 산업 전략의 비전과 기술개발 투자와 같은 국가차원의 실천전략이 요청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정내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세계 이용이나 자동차 운행시 연료를 적게 쓰는 에코 드라이빙 혹은 바이싱 시스템의 생활화, 로컬 푸드 운동과 이것의 일환인 공동텃밭 가꾸기에 적극 동참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12-13). 따라서 녹색성장은 비단 저탄소도시건설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향한 수단이기 보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이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생활양식의 혁명이 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자원사용방식을 강조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전환과 녹색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생활화하는 그린라이프가 주요한 추진 전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각각의 그린라이프는 과거처럼 서구 선진국의 방식을 답습한 일면적인 것이기 보다는 중심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3세계 국가의 남녀, 어린이와 노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되 각각의 역할과 기여가 다른 주체들 사이에 상호 소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로지 브라이도티 외, 1994). 무엇보다 21세기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지역 및 도시가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그린라이프의 최적의 단위 역시 지역 혹은 도시로 규정할 수 있다.

소위 세계도시로 칭해지는 주요 도시들은 국가의 매개 없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이 처한 위치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역발전의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를 무대로 지역이 무한경쟁 하는 시대에는 사회갈등 또한 하방화 및 탈 이념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거주지로서 지역성이 갖는 고유성과 효과성은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린라이프의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은 생활거주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다(Voydanoff, 2001).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범주와 함께 사회관계적인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최일섭, 류진석, 1996; 신윤정 외, 2007). 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특정한 지역의 공간적 범주에 따른 정체성이 핵심이나 현대사회의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특정의 지역적 범주보다는 특정가치를 공유하며 일정한 상호작용의 망을 유지하는 관계적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은 때로 중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들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행위자체는 개인은 물론 가족생활을 위한 합리적 전략의 일환이다(Bowen et al., 2000).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주요한 기준을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안전, 쇼핑이나 오락의 기회 등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거주지역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족의 욕구와 생활방식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S. Sweet, R. Swisher, P. Moen, 2005). 이는 곧 지역의 가족친화적 요소가 지역의 선택과 지역활동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과 일체감 형성에 핵심요소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수준에서는 쉽사리 포착되기 어려운 삶의 구체성, 일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높은 가용성, 손쉬운 소통방식과 다양한 유대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고취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족 삶의 터전으로서의 핵심적인 여건을 갖춘 가족친화지역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그린라이프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장(場)이자 젠더와 세대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적 계획과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공기제라고 할 수 있다.

3. 가족친화환경의 개념과 구성원칙

가. 가족돌봄의 위기와 가족친화환경

21세기를 전후하면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및 비정형가구의 증가와 같은 급속한 인구학적, 가족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급속한 기술혁신과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 무한경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가족 내 역할분담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과거와는 다른 가족구성

식이 등장하면서 가족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노인가구와 다문화가족,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가족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제도이기 보다는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구성과 해체가 가능한 구성체로서의 성격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 내 역할 및 권위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성별분업체계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역할과 가사노동 및 양육 담당자로서의 여성 역할은 남녀가 함께 일하는 이인소득자 가족모형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구성과 해체를 경험하거나 해체 후 재구성과 같은 일련의 가족형성을 반복 경험하는 가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돌봄 기능 또한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친족체계와 지역의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면서, 과거에는 한 동네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 혹은 동네 이웃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와병중인 가족원 돌봄은 산업화 이래 오롯이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귀속되면서 점차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규모는 급격히 축소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방식조차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 돌봄의 안정적인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지던 돌봄 노동은 더 이상 개별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관심사이자 당면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지원방식은 가족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원을 각기 아동, 청소년,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의 일부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서비스 방식의 대다수가 여전히 개인의 자산조사에 의한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형편이다(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2008). 그 결과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친화 지역환경은 상당히 유용한 정책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는 자녀양육이나 노약자 부양이라는 공통된 고민에 봉착한 가족들이 개별 가족의 수준에 따라 각각의 해법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현실인

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양육이나 노약자 돌봄을 위해 가족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 정신적인 부담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이웃끼리의 유대와 공동체의식이 약화되면서 빈번한 아동 및 여성 성폭력부터 노인들의 보행권 위협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이 드러나면서 지역환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안전성에는 평소 개인들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기관이나 유관 기관보다는 시민단체나 동네이웃, 주변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현대사회에서조차 이웃과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장미혜 외, 2008). 특히 근자에 들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삶과 공간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이미 착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연동할 경우 가족친화환경 조성사업은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지역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다양한 세대와 가족원의 삶의 질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관점을 도입하고, 가족원들을 위한 지역인프라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원거리 이동이 필요치 않은 생활거주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기회와 가족 돌봄 및 여가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모색한다면 ‘속도감 있는’ 욕구 충족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가족친화환경조성의 해외 동향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역공동체의 기능적 중요성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 예로서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주의 운동(New Urbanism)은 낙후된 도심의 재활성화에 성공한 도시설계의 사례, 즉 도심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걸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숙하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류중석 외 2007:32-36).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자녀양육공동체와 네트워크 형성에 성공한 일본의 세타가야쿠, 가족지역의 연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독일의 헤센 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해밀턴 시 등의 사례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파운드 베리, 미들턴 힐, 티마뉴타운, 바라트 시, 녹색교통혁명의 오스트리아, 노면전차도시인 파리, 일본의 토야마시 등은 과거 마을공동체가 가졌던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사용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환경친화성을 지향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 가운데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지역사회 구성에 앞장서는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00년 이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는데, 가족친화 정책은 중앙의 연방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앙의 연방정부는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지역의 프로그램 촉진 및 재정만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가족친화적 정책 교류와 후원과 관련해서는 2004년 출발한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가 중심적인 역할하고 있으며, 현재 340여개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500개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지역연대는 최근 사회시설, 가족을 위한 시간, 경제적 지원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가족친화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세대하우스(쉼터)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공간을 통해 아동, 가족, 노인 등의 모든 세대가 관련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세대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가족을 위한 공간 및 시간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사업에 기업과 가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주거공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녹지의 제공과 직장과의 이동 편리성, 서비스 지역과의 접근 용이성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인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홍승아, 김혜영 외, 2007: 51-83)

한편 호주는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기능 강화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담당부서인 FaCSIA(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 and Indigenous Affairs)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관계의 증진과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서비스 공급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홍승아·김혜영 외, 2007: 32-5).

뉴질랜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원칙적인 방침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가족친화활동은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성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표방하기 보다는 건강과 안전,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영역별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에는 개인의 고용은

물론 일·가정의 양립지원, 노인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계획은 물론 목표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 지역환경이라는 공통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국가, 혹은 동일국가에서도 지역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적인 지역사례로 분류하는 주요 준거는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 즉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의 확대나 환경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개념과 구성 원칙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가족친화 지역환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박소현은 “가족친화형 마을은 다양한 가족 유형과 그 구성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패턴과 그 요구사항이 바뀌더라도 살아온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소현, 2006:6). 이에 비해 조한혜정은 여성이 가정에서 전담해온 역할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이 가족공통의 기쁨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한혜정, 2006). 또한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친화도시를 자녀양육하기 편한 도시, 부모부양하기 좋은 도시,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배려를 가족친화도시의 핵심적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6).

한편, 강성태(2007)는 가족친화마을의 기본요소로서 “다양한 형태와 계층의 가족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책임이 원활하게 수반될 수 있는 물적 조건과 인적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쾌적한 가족생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가족책임에 대한 지역환경의 배려와 쾌적한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사회환경법’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을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로 규정하고 있다(제 2조 4항). 이에 비해 홍승아 외(2007)는 “가족친화지역사회란 지역사회의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성인, 노인 등이 일과 돌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홍승아, 김혜영 외, 20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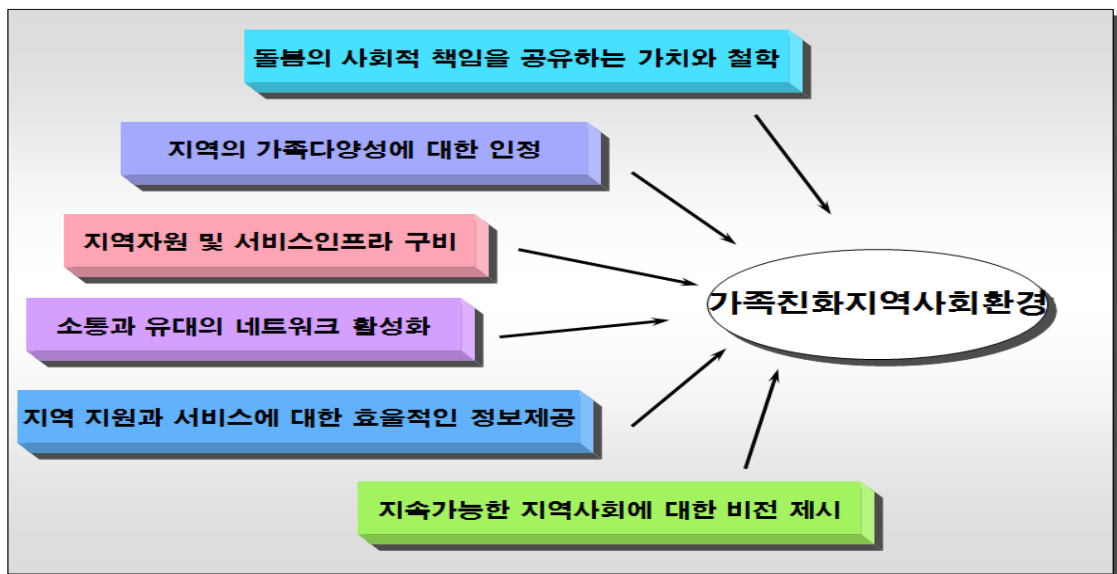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정의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가족친화환경의 핵심은 ‘가족 돌봄의 책임성을 인지하고 돌봄 관련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쾌적한 지역환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녹색성장 역시 생활공동체에 기반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주요 가치를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개념에 통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가족친화 지역환경은 가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운동의 적극적 참여는 가족친화환경조성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가족친화 지역환경은 “개인의 일과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되고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충분히 배려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원 모두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기실 가족은 변화하지 않는 채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thing)이기보다는 변화하는 유기적 속성이 강한 사회제도이다.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 주기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가족원의 욕구와 선택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변화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은 유행하는 문화트렌드나 이용 가능한 자원, 미래의 목표에 근거하여 그 때마다 전략적으로 가족 고유의 선택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환경에 대한 가족의 요구나 특정한 지역을 선택하는 행위 역시 개인이 노동자로서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해 추구하는 다양한 적응적 전략행위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 또한 항상적이고 고정적인 것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가족의 지역사회 선택요인은 보편적으로 일치하는데, 특히 지역의 안전, 주거의 질, 이웃, 오락이나 교육의 기회, 지역내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요소의 우선순위와 배열 또한 가족 주기상 요구되는 가족역할이나 시간, 돈과 같은 가족자원의 규모, 거주지역이 가족원에게 미칠 관계적 맥락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만으로 가족친화지역사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살기 좋은 지역환경이 곧 가족친화지역사회가 아닌 것처럼, 가족친화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만으로 가족친화지역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친화지역사회의 구성요소들을 배치하거나 재구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에 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는 자녀와 노약자의 돌봄 책임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돌봄의 책임성과 가족돌봄을 지역사회가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배제된다면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지역발전계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가족친화지역 사회는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거나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만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가족형태나 계층의 사람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개별 가족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역 내 가족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개별 가족의 일상적인 문제와 가족돌봄의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자원과 관련 서비스 인프라가 구비되어야만 가족친화지역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네번째로는 개인과 이웃,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족과 가족의 유대, 가족과 지역의 유대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자원 및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별가족을 넘어 지역 주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친화 지역 환경의 발전계획에 더 많은 가족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가족친화지역사회의 구성 요건

4.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친화 지역환경은 가족의 구성여부나 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거나 노인과 몸이 불편한 가족원을 돌봐드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조성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에 따른 실행전략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가족친화환경조성은 완결적인 과업이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들)이 더불어 공존하면서 가족에 대한 돌봄 책무를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비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지역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과적인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지역마다, 지역에 대한 가족원의 욕구와 참여가족의 특성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제시하는 실행전략은 다분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이므로 그 의미 또한 제한적인 것이다.

지역의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의 현실과 욕구를 진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현안문제의 발굴이다. 지역내 가족에 대한 조사는 지역사회의 가족형태와 구성, 이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유관단체, 즉 지역의 시민단체, 복지관, 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을 통해 지역 내 가족의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기적인 가족조사보고서 생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독일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가족 관련조사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내 가족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안을 중심으로 가족친화환경 구축에 관한 기본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 내 관련기관 실무자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향후 지역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정을 통해 충분히 그리고 여러 차례 수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완의 계획서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음으로는 가족 돌봄 및 여가, 노인 부양과 관련된 서비스 기관을 상호 연계하고, 이들 기관 실무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들 기관 종사자들은 지역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현안 발굴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유한 지원프로그램에 정통한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모임과 교류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각 기관의 정보를 상세히 공유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미 지역보다 구성되어 있는 기성의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가족친화환경조성이 소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첫 단계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목소리내기로 부터 출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 단계에서 파악된 지역의 현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긴요한 지역현안일수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을수록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를 위한 모임이 몇 차례 지속된다면,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결사체나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의 현안이 다소 중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임이나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때로 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가족관련 이슈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자녀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때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역내 소모임이 진행되면서 점차 지역문제에 적극적인 주민이 생겨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이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단계에서 가족친화환경조성 사업은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이들 모임의 수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게 된다.

사회적 계층이나 가족형태에 구애받음이 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지역주민의 참여만이 지역주민의 욕구와 눈높이 맞는 지역과제를 발굴할 수 있지만, 개인에 부과된 다양한 생애과업은 결코 지역주민의 참여를 당연시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가족친화환경조성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컨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역 환경조성과 다양한 돌봄 자원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성은 가족친화환경조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의 행정기관은 오히려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지원인프라를 구비하고 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활성화된 기존 조직이나 모임이 없다면 행정기관을 주축으로 가족 참여가 용이한 마을 축제나 이벤트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지역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이미 활성화된 모임

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다양한 품앗이, 동호회, 모임 등의 연계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는 곧 그 지역사회의 구조, 근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망은 향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나 서비스 인프라의 확대를 요청하거나 스스로의 해법을 마련하여 지역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자로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이다. 활성화된 지역모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이나 소모임, 동호회, 품앗이 조직 등의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통의 취미나 기술,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모임들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식과 정보의 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돌봄 지원서비스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이나 노인돌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돌봄 품앗이의 형태로 유·무급의 돌봄노동 지원 체계를 구성하거나 지역주민의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여 대안적인 사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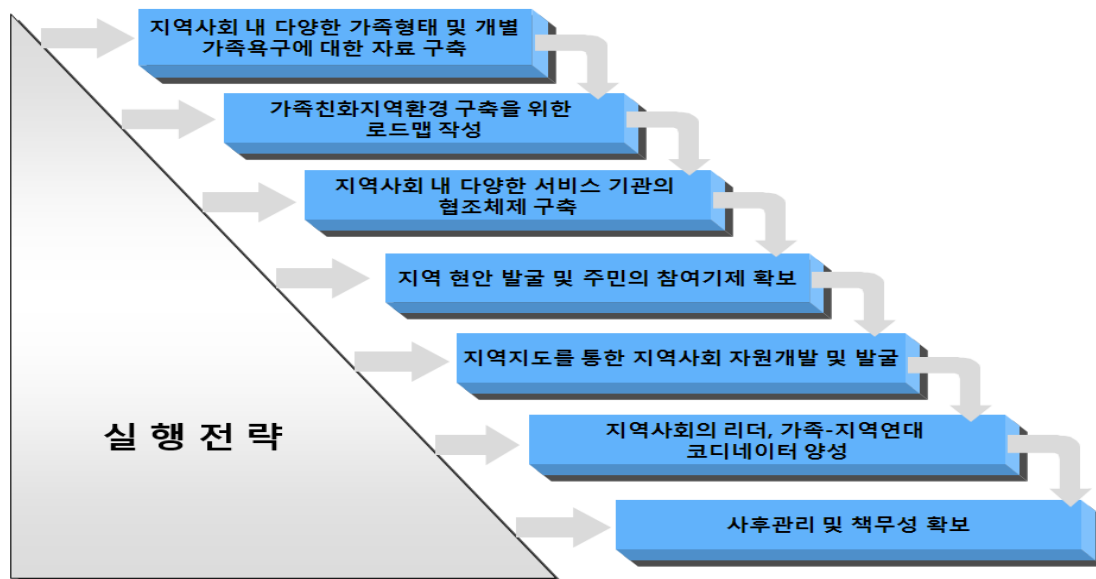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활동가나 지역모임의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고유한 개인과업은 아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 지역리더들은 향후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훌륭한 자원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이들을 가족친화환경조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고, 지원의 주체가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관변주도의 활동가라는 오해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이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같은 간접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꼼꼼한 기획과 사후관리가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가족친화환경 조성계획에 관여한 다양한 주체, 즉 다양한 가족이나 가족원, 지역 단체 혹은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책임성이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책임의 범주는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다. 추상적인 수준이나마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가족, 지역단체 및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역할

주체	역할
개인·가족	지식, 기술, 태도 등 긍정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교육 적극적 참여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의 개선
주민단체나 다양한 모임 · 지역사회	함께 하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책임성 인식 개인/개별가족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에 확고한 철학과 의지,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사회단체 및 민간분야의 활동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 시행, 평가
중앙 정부	가족 및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 비전과 하부 정책 수립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제정과 평가에 따른 보상체제 구비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매뉴얼 제시

이상에서 논의한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

5. 나오면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의 급속한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가족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은 바야흐로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경쟁의 강화와 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로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조차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근자에 들어 가족친화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러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가족친화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신정부의 국가전략으로 등장한 녹색성장과 가족친화환경의 논리적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개념적인 수준에서 가족친화환경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적 개념이자 주요 실천기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환경의 개념과 이와 연관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가족친화환경의 구성요건과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된 녹색성장의 담론과 가족친화환경조성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의 완결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가족친화환경에 대한 논의는 지역사회의 범주와 수준, 즉 지역의 구나 동 단위 혹은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지역경계에 따라 마을이나 동네 수준에서도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환경 조성의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주요한 정책 범주로부터 혹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활동의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가족친화환경 논의의 다차원성과 내용적 변화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과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자원 동원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수준에서의 지역주민 참여가 요청된다. 또한 각 지역 상황에 따라 과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지역의 동원가능한 자원의 범위와 수준에 의해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은 변화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가족친화환경의 구성요건과 전략을 살펴본 본 논의는 상당히 제한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향후 녹색성장과 가족친화환경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교한 이론의 발전과 구체적인 실행매뉴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태(2007),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제이플러스 애드.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2008),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중간보고 자료
- 김승택(2008),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제노동 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 김일영 외(2008), 『녹색부국으로 가는 길』 문화체육관광부
- 데이비드 체니(2004), 라이스타일(김정로 역), 일신사.
- 로지 부라이도티 외(1994),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 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역), 나라사랑, 1994.
- 류중석 외(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 박소현(2006),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신윤정 외(2007), 『출산·양육관련 지역사회자원활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울리히 벡(1986),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06.
-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1990),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혼란』 새물결, 1997.
- 유정길(1994), “생태적 대안사회와 공동체 운동”, 『환경논의의 쟁점들』 (환경연구회 편), 나라사랑
- 장미혜·윤덕경·안상수·김영택·이승훈(2008),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인 프리드먼(2002), 이박혜경 역, 『페미니즘』 이후.
- 조한혜정(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또 하나의 문화.
- 최일섭·류진석(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 홍승아·김혜영·류연규·相馬直子·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현미라(2006), “지역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경험의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Bookman, A.(2004). *Starting in our own backyards: How working families can build community and survive the new economy*. London: Routledge: pp. 263-264.

Bowen, G., Richman, J., & Bowen, N.K.(2000), "Families in the context of communities across time", in S.J. Price, P. C. Mckenry & M.J. Murphy(Eds.), *Families across time: A Life Course perspective*. Los Angeles: Roxbury

Patricia Voydanoff(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uy, Work & Family* Vol.4(2)

_____(2001), "Incorporating community into work and family research: A review of basic relationship", *Human Relations* 54.

Stephen Sweet, Raymond Swisher, Phyllis Moen (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Ashburton Community Report(2007)

www.babywebnz.org.nz/display/BabyWebNZ/Survival+Guide_Events

www.familyservices.govt.nz/our-work/strong-families/hippy.html

‘녹색성장’과 여성주의 녹화(greening) 사이의 긴장과 소통

윤 혜 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오늘의 학술대회는 녹색성장과 젠더 거버넌스를 연결시키려는 매우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담론들은 사람, 사회, 그리고 자연의 재생산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지구/지역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실천의 패러다임을 추구해보자는 결연한 의지의 소산으로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경제발전지상주의나 생산력주의처럼 경제적 차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뭉치 절대화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사람--사회--자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나가야 할 목적지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녹색성장에 관한 모든 수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의 열개를 맞출 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윤리성을 포함시켜 확장된 시야를 통해 앞으로 희망적인 활동들과 가치표들이 생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논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녹색의 가치와 성장의 가치가 충돌하나요 혹은 양립 가능한가요?

우선, ‘녹색’과 ‘성장’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관시켜 사유할 수 있을까요? ‘녹색’은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거기에 평화로운 가치가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장’ 또한 한 사회가 퇴보하거나 정체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질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음을 뜻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색’을 ‘녹색답게’ 추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을 생각해 봅니다. ‘성장’을 경제지표의 향상이나 양적 발전을 넘어서 ‘문화적 성숙’이라는 지난한 과제로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 성찰해야 할 대목들을 고려해 봅니다.

녹색을 속도전으로 하면 민둥산에 녹색 페인트칠을 하는 결과 이상을 낼 수 있을까

요? 녹색벨트를 풀면서 녹색성장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정책적 기조가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발표문 7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은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에서 전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녹색성장론이 어떤 의미에서 성장지향성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한국사회가 GN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려는 목표 대신, 대중의 삶의 질에서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공염불이 아닌지요?

‘녹색’이 진정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최고선일 것이고 이것은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그것은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에 회색 일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현행 친환경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사장되고 있는 상황들,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계몽과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는 물질문명의 경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이 “개인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미시적이고 촘촘하고 철저한 새로운 패러다임(생활양식)이 되려면 산업화, 정보화, 녹화 중에서 녹화가 가장 더디고 가장 정성이 들어가야 함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살아보세”의 인화성 구호가 대중 동원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속도전을 치루었던 과거의 성취와 다르게 녹화는 삶의 기술적, 물질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목적적 가치이기에 더 도달하기 어렵고 비가시적인 차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2) ‘녹색성장’의 틀은 지속가능한 발전론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지속가능성 담론에서는 국가간, 남녀간, 사회계층간, 지역간의 균형을 전제로 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형평성(equity) 기준을 유지해 왔다고 보는데 녹색성장론에서는 신기술과 신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기준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방향’(발표문 12쪽)은 성 중립적으로(gender neutral) 보이지만 기실 홍승아 선생님의 지적처럼 남성 기술직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국 사회내 지역적 형평, 그리고 국가간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녹색성장의 추동력인 대중의 자발성과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고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형’이 결국 대기업 위주의 신기술 창출과 부가가치 확장으로 귀결된다면 한국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 표준과 ‘녹색 성장’의 개념적 연관이나 분절의 관계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함태성, 2009)는 전자에 대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후자는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쩌면 둘 다 양 측면을 갖고 있기에 충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 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개념보다 명확하게 경제와 생태의 상생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김은경, 2009)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서구적 표준과 ‘녹색 성장’ 전략을 채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지향 국가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가 생산적일 수 있는 공통 출발점은 최소한 현재의 환경의 질을 더 떨어뜨리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을 개선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과 비판적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이 그간 성평등을 온전히 향유해 오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체화된 인식 이상의 감수성을 통해 지금의 총체적 위기는 생활공간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사회나 자연에 전반적으로 생명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가 반(反) 생명적이듯이 사회적 형평이나 통합의 해체도 반 생명적이며, 사회 관계들이 반 생명적일 때 자연의 생명력도 서서히 와해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체험한 아픔을 사회와 자연과 나누면서 모두 다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녹화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경쟁력을 물질 차원에서 확보할 것이 아니라 ‘가치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의 가치를 복돋고 실천하는 길로 갈 때 발전적인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3) 여성은 소비자인가요, 녹색 사람--녹색 사회--녹색 자연의 생산자인가요?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성별 분업(세대 재생산, 세대간 돌봄 등)을 넘어서 지역성의 생산자로 가야 한다는 발표자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생협운동이나 교육운동, 녹색문화운동, 지역사회 모임과 생활정치的主체가 되는 방식 등을 통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중단시키고 대안적인 생활문화를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들 안에서 구성원 간 경쟁의 논리와 협동의 논리가 함께 공존하게 하고, 공동체 밖에서 그간 경제 차원이 사회 차원을 압도해 온 상황에 균형을 회복하게 하는 실천적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방식을 소비해 온 여성이 새로운 녹색문화의 생산자로서 행위성을 창출할 때 그 힘은 매우 위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다양성은 지역성의 생산적 차이를 통해 확보된다고 볼 때 복수적인(plural) 공동체들이 개성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생산의 길 안에서 상품관계가 생활세계까지 침윤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지역 공동체들을 지구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가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는 것은 지역과 지역이 문화를 교류하고 삶의 자원들을 상호적으로 생산-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자연의 유기적 순환의 고리가 재생산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은 여성, 지역주민 등 행위자들의 상향적 활력과 결합할 때 실행력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의 종자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거목이 되어 가는 과정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역시 녹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괴테, 파우스트)

녹색성장과 지역환경 조성

김 은 희

(걷고 싶은 도시연대 사무국장)

1. 녹색성장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경제통합,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적 효율성의 증가, 국민 복지증가, 자연자본의 성장과 복원을 통한 생태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김은경/한국미래발전연구원 지속가능센터장)
2. 현재 한국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은?
 - 1)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따라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 측면으로 도시공간 및 건축 등 물리적 환경 계획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2) 또한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패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다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3) 대규모 대량생산, 대량소비 패턴의 변화 역시 대규모 물리적 공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한 양질의 고용정책과 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녹색성장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 1) 여성을 ‘젠더’로서의 관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물론 현재에도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정책 등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의 ‘남성’ 역시 ‘신체 건강한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성소수자 등 약자로서의 남성이 중심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체적 약자일수도 있고, 정신적 약자

일수도 있고, 보편적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존재일수도 있다.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성소수자, 저소득층 주민, 싱글맘 싱글대디, 미혼모,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 등 매우 다양한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속에서 사회통합이나 인권, 복지, 자본의 횡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 실천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는 관점과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대상화된 여성’을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전환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2)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해 생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천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의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소비패턴의 변화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각이 사회화되면서 전체적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사회화 과정은 캠페인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화하는 것이다. 즉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참여의 자발성이 형성된다. 이에 대한 주도적 역할자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단체들의 갖고 있는 성과와 의의,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떤 방향과 전망을 도출해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1) 녹색성장과 가족친화 지역환경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 녹색성장에서 생활세계,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 필요 → 정책의 거시성, 공간의 광역화에서 정책의 미시성, 공간의 세분화 필요. →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수립 및 실천 가능 → 상향식 정책 및 전략 수립
- 자본집중식의 대규모 생산, 소비 양식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생산, 소비는 지역의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며, 또한 점진적인 쇠퇴 및 새로운 전환 동력을 형성시킴

2) 녹색성장은 공동체 또는 지역환경의 개발과 관련성을 포함시키며,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환경, 건축, 커뮤니티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친환경도시계획이나 건축 등 물리적 환경계획에 대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나 마스터플랜은 매우 부족하다. 용도구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녹색교통수단간의 네트워크 체계는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자전거도로 연속성의 허구), 관공서의 에너지 소비절감 정책이 건축 설계과정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외국의 사례), 공원 녹지정책과 재개발의 모순 (뒷산은?), 원주민들의 정착율을 최소 50%이상은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있는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이는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3) 또한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정비와 타인의 시선이어야 한다.

- 이런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휴먼스케일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보행권은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권익을 되찾자는 것인데, 물리적 환경정비는 ‘걷기 편한’의 의미이지 ‘걷고싶은’의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시설은 강력한 제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는 참여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합의의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4) 걷고싶은 도시는 -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시/ 노인과 장애인에게 친절한 도시 / 대중교통이용자에게 편리한 도시 /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 /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일례로 위와같은 실천전략을 지역사회에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젠더 관점에서 녹색 성장의 재 개념화

조 영 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환경 관리 기술 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함과 동시에 기존산업과 상호융합을 시도하여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 성장을 위한 10대 추진 방향을 보면 녹색 성장은 에너지 부족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발전 모델로 기업경쟁력을 발전시키고 교통, 건축, 문화 등 사회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 성장은 마치 IT, BT, NT 분야에서 녹색 기술과 관련된 분야 혹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녹색 성장의 목표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녹색 성장이란 경제,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경제성장(발전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단순히 녹색기술로 대치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녹색 성장은 토지 이용, 주택, 교통, 환경, 산업, 행정계획 등 다방면에서 가치 지향점이 달라져야 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환경문제와 사회 차별의 문제를 경제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녹색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녹색 공동체(green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녹색 공동체는 다 계층적인 사회 구성, 즉 소득,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라이프스타일 등의 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된 경제, 친환경적 생태 도시, 충분한 사회복지 시설, 안전한 환경을 구

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경제성장, 시민권, 거버넌스, 공동체 특성, 도시 설계, 환경, 삶의 질, 정체성, 안전 전반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표 1> 지속가능 공동체와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

범주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동체
경제성장	-경제 기초 튼튼 -장기적 계획에 의한 경제발전 -폭넓은 노동자들의 안정적, 통합적 고용	-발전담론 지배 -고용기회 부족 -취약, 불안정, 단기, 분절적 고용
시민권	-활동적인 시민과 공동체 -장기적 관점의 커뮤니티책무 -효과적인 정치참여 및 개입 -건전한 자원봉사/ 강력한 사회자본	-의존적이고 수동적 시민과공동체 -커뮤니티 참여 및 주인의식 부재 -자원활동/사회자본 부족
거버넌스	-대표성확보, 책무감있는 거버넌스 체계 -전략적, 위로부터 비전제시와 통합적,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 균형	-폐쇄적, 책무감 없는 거버넌스체계 -수동적인 대의민주주의 과도하게 의존 -비전제시 부족 -편협한 지방성
공동체 특성	-다양한 숙련노동자 노동력 풀 -사회적, 인종적으로 다양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주민 거주 -균형 잡힌 공동체 -적절한 인구밀도의 마을들	-숙련노동자 부족 -지역적으로 불균형 -거주민 집단별로 물리적 분리 심화 -다양성 부족 -공식/비공식적 분리와 격리 -인구 부족
도시 디자인	-다양한 건축물 -공공 공간 접근성 -도시 조밀도 높음 -도시 쾌적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건물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커뮤니티 -새로운 '명소' 창조	-획일적, 구획화된 건축물 -폐쇄적, 문으로 닫힌, 접근어려운 공 공 공간 -지역사회 시설 부족 -나선형 도시구조 -특성 없는 도시 외곽 개발
환경	-토지(brownfield) 재사용 -교통 이동 최소화 -양질의 대중교통	-녹지(greenfield)확장 -교통이동 극대화 -승용차의존도 높음 -대중교통 부족
삶의 질	-매력적인 환경 -삶의 질 높음 -다양한 사회집단 흡인력 강함	-삶의 질 낮음 -다양한 사회집단 방출
정체성, 소속감, 안전	-지역사회 정체성, 소속감 높음 -다양한 집단 거주민들 간의 이해, 존 중, 포용, 관계맺음 -범죄율 낮음, 반사회적 행동 적음	-지역연합문화 부족 -공적 공간에 대한 소유권 -타 집단에 대한 포용력 낮음 -범죄율 높음, 무질서, 공포감

Source: Adapted from Raco(2007: 171)

녹색성장이 기존의 발전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성들은 녹색 성장에 수동적인 수혜자 혹은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혹은 절약을 위해 동원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의 발제된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녹색 기술/에너지 분야는 전형적으로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산업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

녹색 성장을 그린 산업의 경제성장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녹색 성장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이들에 의해 차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주 생활세계와 일상경험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은 젠더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가능하고 이것이야말로 녹색 성장을 녹색 공동체에 기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녹색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여성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 없다. 녹색 성장은 가족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지역 설계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녹색 커뮤니티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이 녹색 성장 산업의 주역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여성의 경험, 삶의 조건을 고려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녹색 성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 제공, 지역 사회 중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여성들이 지역사회 개발/재생, 환경보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 지역사회 중심의 비즈니스 개발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젠더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보는 것, 그것은 기존의 녹색 성장에 여성을 단순히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녹색 성장의 가치와 지평을 확대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녹색 성장과 여성의 역할

이 병 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본부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지구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기존의 사회경제체계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사회경제체계로는 더워지는 지구를 식힐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저탄소 사회경제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 모르고 있거나 모두가 위험에 빠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사회경제로 가기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지만, 녹색성장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의 발굴, 기존 산업의 저탄소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 온 양 중심의 가치를 질 중심의 가치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구 생태계와 공존해야만 하며,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 가수가 불러 히트한 노래말에서 “지구위의 반은 여자”라는 표현이 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여성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생활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모두가 여성의 의해 선택되고 있으며, 실제 가계소비에서 여성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장이다. 먼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저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의지와 함께 소비자의 저탄소 선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은 새삼 거론할 이유가 없겠다.

우리나라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보면 여성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집의 선택,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아이의 교육 등에 걸쳐 남성의 역할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에 있지만 여성은 이를 선택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대부분을 담당한다.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저탄소 사회는 결국 여성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가치를 우리의 가치판단의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큰 집과 큰 차가 좋은 것이냐고 물을 때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집과 차가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마을, 집에 살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매하고, 탄소를 덜 내뿜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북극 꿈은 북극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